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June vol. 114

국방예산, K-방산과 자주국방의 원천

“호국보훈의 달, 굳건한 미래를 다져나가는
국방예산의 가치를 전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June

vol. 114



호국보훈의 달, 굳건한 미래를 다져나가는 국방예산의 가치를 전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국방예산은 국방 기술혁신과 선진강군 육성을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호국영령의 피와
땀을 의미 있게 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강력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국방 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8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재정 NOW

04

재정 칼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예산의
역할과 방향

- 이동현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국방예산 투자방향

- 이혁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4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월간 재정동향」6월호 기준

18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24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40

재정 캘린더





FIS 재정

78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80
재정정보원 소식

82
애독자 코너

재정 NAVIGATION

42
재정제도 이야기
'IMF 경제위기 대응'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58
재정이 MONEY
국가예산 결산감사와 K-방산
- 유경연 대령, 해군대학 교수부장

66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대동법 시행 이후 중앙재정의 부족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최주희 덕성여대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72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안중근, 불의한 권력에 맞선 공공 책임과
재정윤리의 출발점
-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예산의 역할과 방향

이동현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



다층적
안보환경의
구조적 전환



2026년 국방예산
65.9조 원, 방위력개선훈
중심의 7.5% 증액



자주국방의 원천으로서
'국방예산-국방 R&D-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



역지의 비용을 넘어
미래의 투자로, 성과
중심의 국방재정 운용



들어가며: 다시 쓰이는 안보의 방정식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서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그 헌신을 기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시는 같은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고 그 의지를 구체적인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국방예산은 바로 그 약속이 숫자로 표현된 영역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곧 국방예산에 담겨있다.

2026년 한국이 마주한 안보환경은 어느 한 방향의 위협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상수 위에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위협은 다층적이고, 동맹의 선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였다.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즉 핵심 군사비 3.5%에 인프라·사이버 등 국방 관련 비용 1.5%를 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2014년 합의된 2% 목표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유럽의 재무장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현실이 되었고, 동맹국 전반으로 방위비 증액 압박이 확산되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가 2.8% 안팎인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결국 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위협이 늘면 대응 비용이 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배분하느냐가 곧 국가의 전략이 된다. 국방예산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 가장 구체적

인 숫자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국방예산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보고, 자주국방의 원천으로서 국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2026년 국방예산의 구조와 메시지

2026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 제출안(66조 2,947억 원, 8.2% 증가)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며 4,30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증가율 7.5%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이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7.9조 원으로 편성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이 단행된 점을 함께 보면, 재정 건전화 압박 속에서도 국방을 우선순위에 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읽힌다.

예산의 무게중심은 미래 군사력 건설에 있다. 무기체계 획득·개발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으로, 군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운영비(45조 8,989억 원, 5.8% 증가)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가파른 증가는 한국의 국방예산이 ‘유지’에서 ‘도약’으로 축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사업을 보면 방향성이 더 뚜렷하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AMD-KMPR) 예산은 7.3조 원에서 약 8.8조 원으로 21.3% 확대되었고,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 광개토-III Batch-II, C-130H 성능개량 등 핵심 전력이 반영되었다. 첨단강군을 뒷받침하는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은 19.4% 늘어난 5조 8,396억 원으로 편성되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첨단항공엔진·스텔스 등 도전적 기술과 국방우주 분야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인구 구조 변화로 병역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안정적 군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당직 근무비 인상,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 경비 신설,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장기복무 유도를 위한 적금 신설 등 간부 처우 개선이 폭넓게 반영되었다. 첨단 무기체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이를 운용할 숙련 인력이 없으면 전력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처우 개선은 복지 지출인 동시에 전력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요약하면 2026년 국방예산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다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으로 증액하되, 그 재원을 첨단전력과 기술, 그리고 사람에 집중 배분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원천: K-방산과 국방재정의 선순환

국방예산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은 ‘소모성 비용’이다. 안보는 공공재이고 그 비용은 치러야 하지만 회수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K-방산의 부상은 이 등식을 다시 쓰게 만들고 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약 23조 원)로, 전년(95억 달러) 대비 60% 넘게 증가하며 급증했다. 수출 대상국은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늘었고, 폴란드·루마니아·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페루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었다. 주요 방산기업 5개사의 수주잔고는 2025년 3분기 말 약 90조 원으로 2020년의 세 배 가까운 수준까지 쌓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년 방산 수출이 27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재정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 획득과 수출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방예산으로 무

기체계를 개발·양산하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양산 경험, 운용 실적이 수출 경쟁력의 토대가 된다. KF-21의 양산 본격화가 수출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것이나, K9 자주포·K2 전차가 해외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것 모두 국내 소요와 국방 R&D 투자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다. 다시 그 수출은 기업의 매출과 고용, 법인세수로 이어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내 도입 단가를 낮춰 예산의 효율을 다시 높인다. 국방예산-국방 R&D-방산 수출이 하나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국방 지출을 ‘공공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 자산을 남기지 않고 그 해소되는 지출은 소비이지만, 미래에 더 큰 편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지출은 투자다. 국방 R&D와 방산 생태계에 대한 지출은 안보라는 본연의 편익에 더해 산업 경쟁력과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투자형 지출’의 성격이 짙다. 자주국방의 원천은 결국 스스로 무기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산업적 기반에 있으며, 그 기반은 재정의 꾸준한 선투자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다.

국방예산의 방향:

역지의 비용에서 미래의 투자로

그렇다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네 가지를 짚고자 한다.

첫째, 양적 증액을 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NATO의 GDP 대비 5% 합의가 보여주듯 국방비의 절대 규모를 둘러싼 국제적 압박은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이라는 투입 지표만으로는 안보를 살 수 없다. 2026년 예산이 방위력개선투입비와 R&D를 운영비보다 빠르게 늘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을 첨단전력과 기술, 그리고 우주·사이

버·AI 등 미래 영역에 우선 배분하는 질적 재설계가 관건이다. 이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전략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둘째, 획득·R&D·수출의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과 수출이 단절되지 않고 서로를 견인하도록, 수출을 전제한 표준화·모듈화 설계, 후속 군수지원(MRO)과 현지화 역량, 방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단품 수출에서 운용·정비·현지 생산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이른바 ‘K-방산 2단계’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은 단순한 개발비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떠받치는 마중물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성과 중심 재정운용 원칙이 국방 분야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방예산은 규모가 크고 사업 주기가 길며, 보안성으로 인해 외부 검증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전력화와 안보 성과로 얼마나 이어졌는가’를 묻는 평가 체계가 중요하다. 사업의 적기 추진과 집행 효율, 전력화 이후의 운용 성과를 추적하고 환류하는 구조가 뒷받침될 때 증액된 국방예산은 비로소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전환된다.

넷째, 동맹 부담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 동맹 차원의 방위비 증액 압박은 한국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다른 분야와의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형적 비율을 맞추기 위한 증액이 아니라, 우리 안보 수요와 산업 전략에 부합하는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맺음말: 자주국방은 곧 재정의 선택이다

국방예산은 위협에 대한 국가의 가장 정직한 응답이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가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다층적 안보환경의 변화 앞에서 양적 증액과 질적 집중을 함께 택했고, K-방산의 도약은 국방 지출을 소모성 비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다시 정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좋은 방향이 좋은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증액된 예산이 실제 전력으로, 산업 경쟁력으로, 나아가 세입 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집행 단계의 효율과 성과 중심의 환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주국방의 원천은 첨단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과 기술, 그리고 이를 길러내는 재정의 일관된 선택에 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예산이 ‘억지의 비용’을 넘어 ‘미래의 투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방예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피와 땀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약속이며, 국방기술 혁신과 선진강군 육성으로 그 희생에 응답하는 국가의 의지다. 굳건한 안보 위에서만 미래를 향한 도약도 가능하다. 점에서, 잘 쓰인 국방예산은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다음 세대의 평화를 준비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국방부·방위사업청, 「2026년 국방예산 확정」 보도자료, 2025.12.
방위사업청, 「2025년 방산수출 실적」, 2026.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6 경제·산업 전망」, 2025.11.
NATO, 「The Hague Summit Declaration」, 2025.6.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8.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국방예산 투자방향

이혁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기술혁신에 대응한
미래형 국방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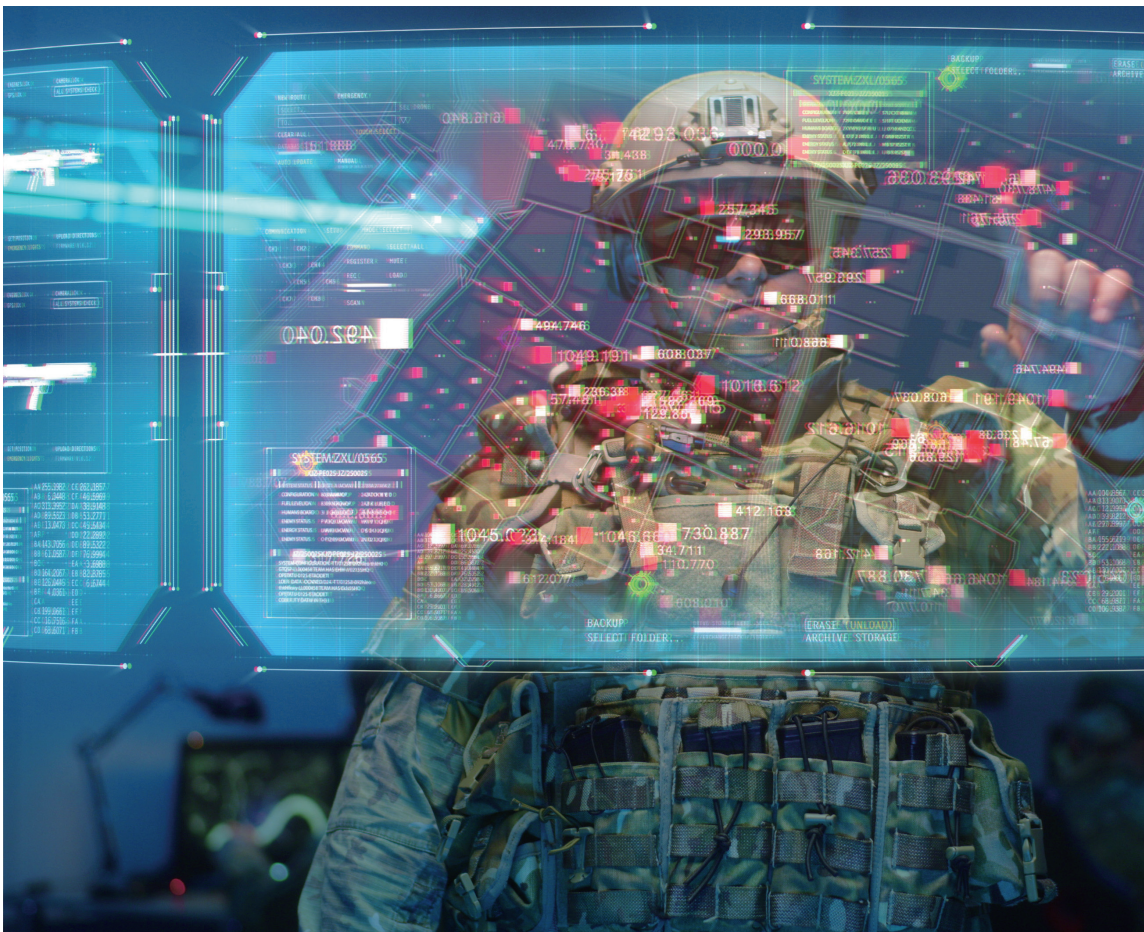
AI·무인 체계 중심의
첨단전력
강화



데이터 기반
운영·정비체계
전환



전문인력 확보와
방산 경쟁력
제고



최근 러·우전, 중동전 양상을 보면, 드론과 같은 첨단 무인 체계가 다양한 전장에서 다목적으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고가의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요구성능이 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과거로부터 전장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더 나아가 전쟁수행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술혁신이 종래의 지상·해상·공중으로 대별되던 전장 영역을 사이버 및 우주 영역까지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병력·화력 중심의 전력구조에 정보와 지적 능력을 반영한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기존의 병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무인감시정찰, 무인전투체계 등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력구조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

국방예산은 미래 전력구조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기술이 변하고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부응하여 국방예산 투자 방향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예산 현황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투자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된다. 방위력개선투자는 지휘정찰사업, 기동화력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 유도무기사업, 방위사업정책지원 등의 예산으로 구성되고, 쉽게 풀이하자면 목표 대비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중심이 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전력운영비는 크게 병력운영비와 전력유

지비로 구분되는데, 병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병력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급식, 피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력유지비는 국방정보화, 장비보전, 복지, 군수지원, 교육훈련,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유지, 예비전력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력개선투자가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전력운영비는 병력, 무기체계를 포괄하여 확충된 전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2026년 국방예산은 약 65.9조 원으로 2025년 약 61.2조 원 대비 7.5% 증액 편성되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하며, 특히 방위력개선투자가 약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로 편차는 있으나 방위력개선투자 대 전력운영비의 배분비는 대략적으로 3:7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중점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투자 확대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대응능력 강화, 인공지능·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 군 사기진작을 위한 병,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국방분야 전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처우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방예산 투자 방향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혁신은 군의 전쟁수행 방식과 전력구조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세 남자 인구 변화에 관한 통계자료로부터 유추할 때, 2030년대 초중반까지 병역자원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7~8년 이내에 군의 전력 및 병력구조를 기

술 중심의 정예병력 운영 개념으로 전면 개편해야 함을 의미한다.

1. 방위력개선비 투자 방향

방위력개선 분야는 인공지능, 무인, 우주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된 무기체계 획득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미래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분석 및 처리, 의사결정지원 전반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위성 감시정찰체계, 무인정찰체계, 레이더 등 다양한 경로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의 움직임과 의도를 식별하거나 예상하며, 이를 근거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드론, 로봇 등과 같은 무인 기술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감시, 정찰, 타격까지 전장에서의 임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임무수행 과정에서 장병의 생존성을 강화하고 병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병역자원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시의적절한 방향이며, 향후 그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정찰·정보수집·분석 능력, 적의 해킹공격에 대비한 사이버전 대응능력, 군의 작전 정보 유출에 대비한 정보보안도 우리의 군사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확보와 강화가 지속되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평시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통신망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전시 정보 네트워크 기반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작전 정보 누출에 의한 작전계획 무력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위협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사이버전 대응능력과 정보보안 능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기술이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결국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이다. 그러나 미래 전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는 별도로 군은 현재의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데, 현재의 국방예산 규모로는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을 충분히 투자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국가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통 연구개발 예산을 책정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고, 기술개발 역시 군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이 지속적으로 군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이하 방산) 분야의 생태계 조성, 특히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성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방산 생태계 조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산물자 및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 시장의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계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어, 방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방산수출 활성화는 방산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방산

생태계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기초체력(Fundamental)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무기체계는 한 번 도입되면 20~30년 이상 정상적인 임무수행 가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의 단종이다. 즉,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소재·부품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 무기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에 대한 자립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부품 공급망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안정적 운영유지는 물론이고, 해외에 수출한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운영유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로부터 우리의 방산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생태계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2. 전력운영비 투자 방향

다음으로 전력운영비는 획득된 무기체계의 효율적 운영유지를 위한 기반체계 마련, 첨단 교육훈련·연구환경 구축,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획득과 양성 분야에 우선적 예산 투입과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무기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일부 장비들을 대상으로 상태기반정비(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태기반정비는 센서 등을 통해 장비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로부터 고장 시점을 예측하고 최적의 시기에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장비의 가동률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태기반정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비 상태를 진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적 우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을 위한 기반, 즉 장비 운용상태와 정비현장을 연결하기 위한 기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역시 지속적으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과기반군수지원은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을 위해 군과 업체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군은 성과지표와 목표를 제시하고 업체는 계약된 군수지원요소를 제공하여, 달성한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수리부속 보급과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체계가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기계식보다는 전자식 부품의 비중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정비기술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 무기체계를 개발한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고 보완요소를 식별하여 신규 개발예정인 무기체계에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군의 입장에서는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기술의 이전과 부품 조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결국, 성과기반군수지원은 방산업체와 사용군 상호간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가 배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성과기반군수지원을 통한 후속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기체계 도입 초기에 성과기반군수지원 관련 예산의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유지보수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앞으로는 첨단기술이 대

부분의 무기체계에 시차를 가지며 반영될 것이 자명한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체계 본연의 성능 발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도입과 함께 무기체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망라한 총수명주기관리체계도 정착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무기체계의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항목을 신설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이 탑재된 무기체계의 증가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무기체계는 상호 연결성, 상호 운용성, 합동성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무기체계 간 원활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고성능의 군 전용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축과 성능 향상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전투발전요소와 요구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유무인복합체계, 인공지능 기반 무인경계시스템 등의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넘어서 이제는 혼합현실(MR: Mixed Reality)로 이어지는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의 군 교육훈련체계 외에도 특히 정비분야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간기업에도 수요가 많은 분야로서, 향후 민군 연구 협력에 의한 체계 도입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예산투자의 필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끝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체계의 획득도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완전 자율형 체계가 아닌 이상 인간과 첨단기술을 장착한 체계 사이에는 상당 부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정보수집, 그리고 이에 근거한 분석결과와 의사결정 대안이 제시되더라도 인간이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첨단기술이 제공한 정보는 무용지물에 가까울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무인, 우주, 사이버 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데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군협력 차원을 넘어 일정 부분 외부 전문인력의 유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이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군 유입을 독려할 수 있는 보수체계와 경력관리 체계 설계가 필요하고, 유입된 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대해서도 군 외부와 동일 수준 이상으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지금까지 언급한 첨단기술 관련 투자 소요들은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분야로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예산 투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해서는 예산투자와는 별도로 제도적·운영적 보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예산투자 규모의 확대 외에도 방위력개선에 대한 투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획득 프로세스 간소화를 들 수 있다. 기술 발전이 과거보다 급격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획득 프로세스가 장기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기술 진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배치한 무기체계의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 무기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기는 하나, 기술력과 필요성, 유용성이 입증된 첨단전력에 대해서는 획득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방분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 현재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성실실패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를 용인하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성실여부 판단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실패한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이나 연구추진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보다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에 대한 도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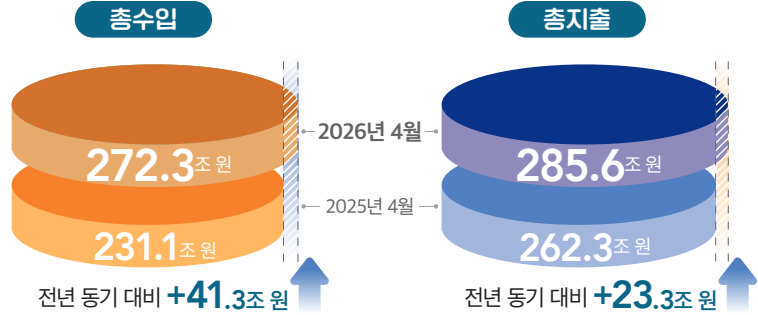
의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MRO는 단순히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용 중에 식별되는 개선 소요 발굴로도 이어진다. 이는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소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MRO 산업의 육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내 정비 소요에 대한 MRO 정책이 아닌 글로벌 정비 소요에 대한 MRO 정책 방향 수립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기술 혁신이 활발한 현실에서, 국방예산이 미래에 대비하여 과거보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의 국방예산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선도 기술 발전에 동참하는 투자수단으로도 작동할 것이며, 이러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자주국방 달성에도 일조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주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주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6.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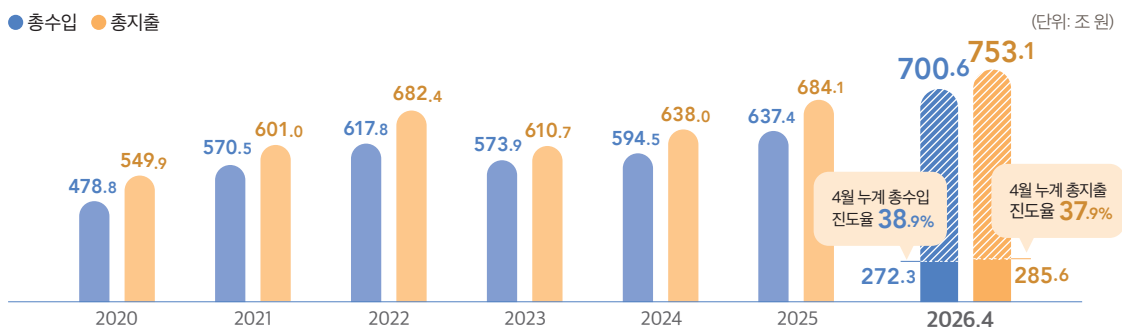
-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4월 말 잠정 기준
 주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주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6.

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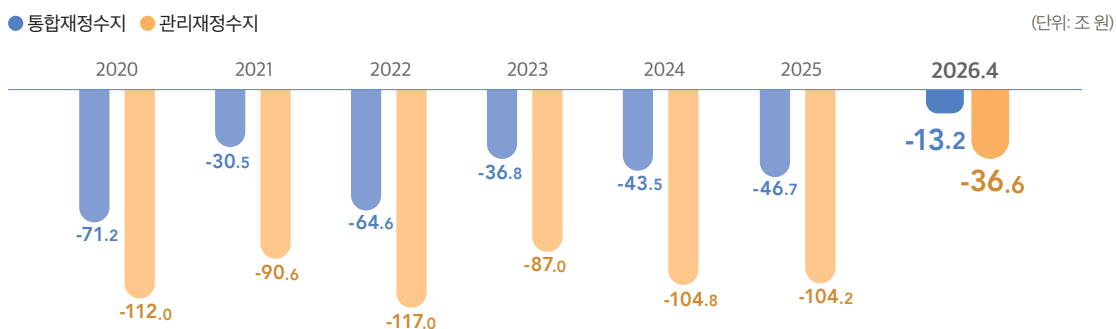
-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0.9조 원 포함시 107.9조 원
 주 2 20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한도액 225.7조 원 중 개인투자용 국채 2.0조 원 제외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6.

● 총수입 ●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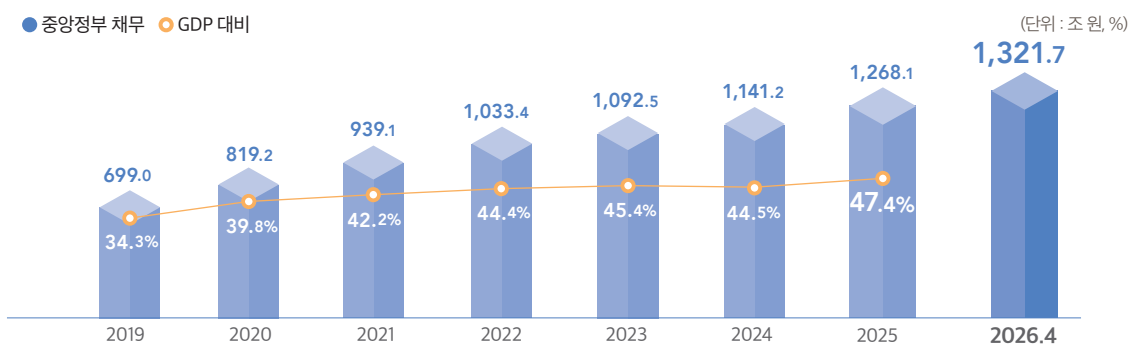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4월 말 잠정 기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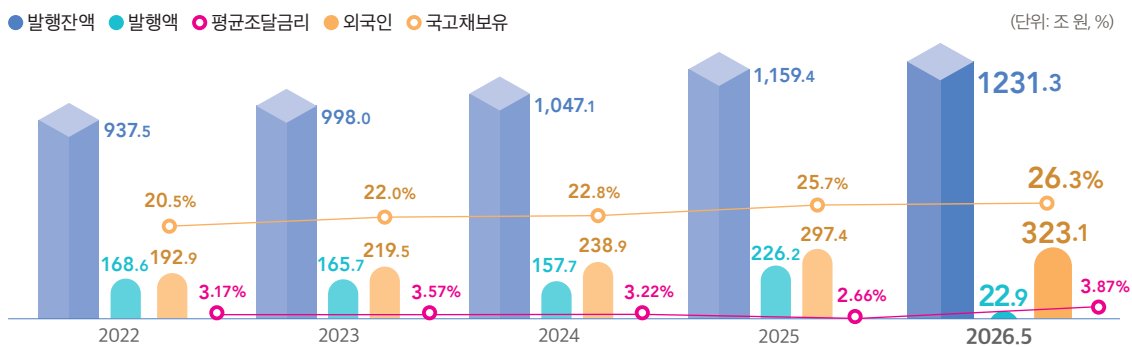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4월 말 잠정 기준

● 중앙정부 채무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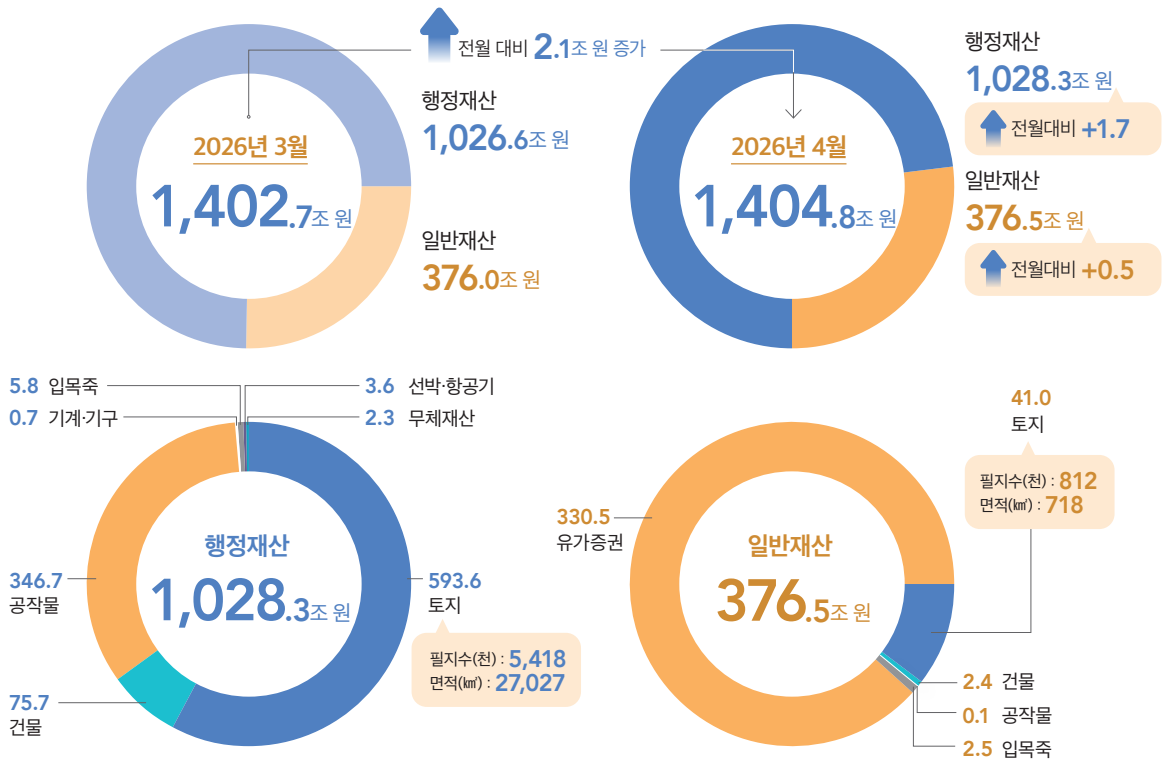


● 발행잔액 ● 발행액 ● 평균조달금리 ● 외국인 ● 국고채보유



국유재산

국유재산 현황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6.

국유재산 수입

● 매각대(토지, 건물, 물품 등) ● 변상금 ● 대여료 (단위: 억 원)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6.

정부출자

정부출자금

2026년 4월

195조 4,286억 원

전월 대비
+7,429억 원 증가

2026년 3월

194조 6,857억 원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0개 기관

(단위: 개)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단위: 억 원)

2026년 4월

195조 4,286억 원

일반회계

877,256억 원

317,777

74,502

482,395

2,581

특별회계·기금

1,077,030억 원

1,017,285

6,066

52,068 1,611

2026년 3월

194조 6,857억 원

일반회계

873,131억 원

317,252

74,502

478,795

2,581

특별회계·기금

1,073,726억 원

1,014,489

6,066

51,560 1,611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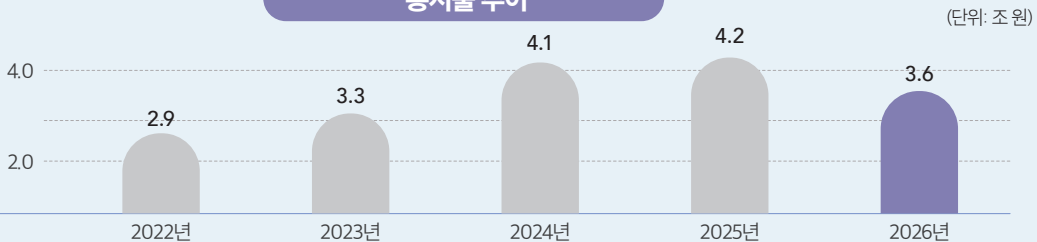
6월호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교부

임무: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비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

총지출 추이



주1 2024년까지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3.6조 원 중 성과관리대상 1.6조 원(45.6%)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236	1.4%	2
전략목표 II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93	1.2%	4
전략목표 III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을 확대한다	15,014	91.0%	5
전략목표 IV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753	4.6%	2
전략목표 V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70	1.0%	3
전략목표 VI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28	0.8%	2

주1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외교부

대표 성과지표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

1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지수



정의

주요 국제회의 및 양·다자회의시, 한반도 평화 관련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결과 문서 도출 건수

선정 사유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공동입장 형성 과정에서 우리 기여를 측정하는 지수

지표 추이

(단위: 건)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신규	15	18	23	25
실적	신규	17	23	24	-

2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



정의

외교부(koICA) ODA 사업이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인도적 지원·보건·교육 분야의 직접적 수혜자수'에 '분야별 사업만족도'를 곱하여 측정하는 지표

선정 사유

외교부의 전략적 개발원조 임무가 글로벌 현안 해결 및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측정 가능

지표 추이

(단위: 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0,251
실적	신규	773,859	847,858	890,251 ¹⁾	-

주1 2025년 실적치는 잠정치

3 재외국민보호 제도 만족도



정의

재외국민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만족' 및 '매우 만족'으로 답변한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 비율

선정 사유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 활동과 연관된 지표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66.5	68.0	68.5	69.0	69.4
실적	67.5	68.2	68.5	69.8	-

외교부

우수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1 국제법적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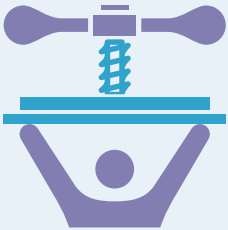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한다

선정 사유 국제법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ICC 활동 등 국제기구 성과와 대국민 공공외교 실적이 우수함

주요 추진 전략

국제법적
기반 구축

국제규범 형성 과정
적극 참여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68억 원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	12건	12건	100.0%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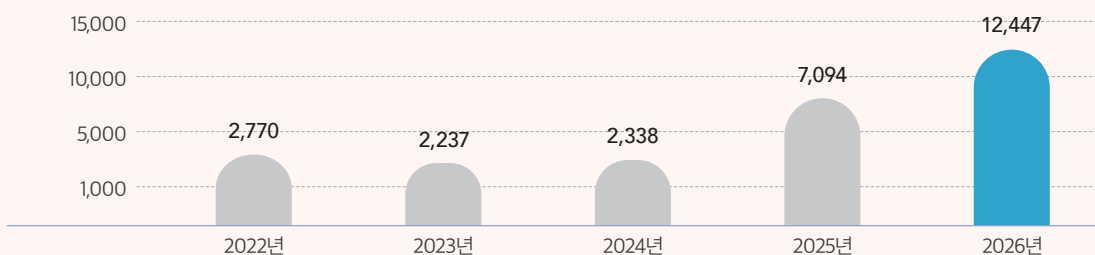
통일부

임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및 기반 조성

비전: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

총지출 추이

(단위: 억 원)



주1 2024년까지는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12,447억 원** 중 성과관리대상 **11,545억 원**(92.7%)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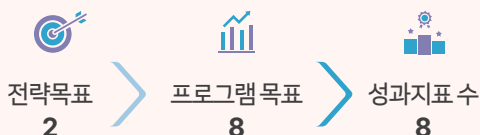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간다	10,140	87.8%	4
전략목표 II	평화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1,404	12.2%	4

주1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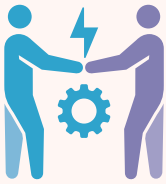
지표 성격



통일부

대표 성과지표

1 남북교류협력기반 구축 지원



정의

교류협력절차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와 현장 모니터링·대응 실적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협력 대응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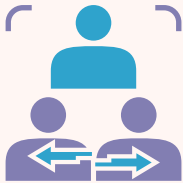
민간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구축·제도화하고 제도적·물적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정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지표 추이

(단위: 건)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신규	신규	384	396	420
실적	신규	신규	451	780	-

2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



정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사회적 대화’, ‘통일체험연수’)를 개최하고 참여자의 만족도와 연수의 효과성을 집계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측정

선정 사유

국민참여 기반 통일정책 추진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만족도, 참여자 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직관적 효과를 보여주며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지속 관리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

지표 추이

(단위: 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3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통일부

우수 프로그램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목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강화

선정 사유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최근 4년(2022~2025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으며 정착기본금 인상, 교육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자활 기반 확충에 기여

주요 추진 전략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811억 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59.7%	61.3%	102.8%



주요국 월간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조 3,201억 달러 	4조 2,737억 달러 	1조 487억 달러 적자 
독일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273억 유로 	1,684억 유로 	411억 유로 적자 
일본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7조 9,233억 엔 	122조 8,762억 엔 	14조 9,529억 엔 적자 
프랑스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41억 유로 	1,675억 유로 	534억 유로 적자 
영국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47억 파운드 	1,191억 파운드 	244억 파운드 적자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April 2026(5.31.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April 2026(5.21.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5.20. 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 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 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0 avril 2026(6.2. 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April 2026(5.23. 발표)

대한민국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72.3조 원 	285.6조 원 	13.3조 원 적자 
------------------------	--------------------	---------------------	---	---	---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6.

해외재정동향 (6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미 인플레이션, 3년 만에 고점 근접 및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우려
- 이란전쟁으로 기업들은 비용증가, 공급망차질, 운영방식의 변화에 직면
- 5월 기준주택 거래 반등, 그러나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에 묶인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

04 영국

- 영국 서비스업 활동 지수,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
- 영국 예산책임청, 2026년 6월 예측 평가 보고서 발표 및 재정 리스크 경고
- 영국산업연맹,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2026년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및 실업률 상승 경고

02 독일

- 유럽연합 집행위, 중동 분쟁 여파로 독일 경제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 전망
- 독일 경제자문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독일 연방고용청, 노동시장 악화로 2026년 8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 직면

05 일본

- 내각부, 2026년 1분기 GDP 속보치 발표
- 총리실, 제7차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성장력 강화와 사회보장 논의

03 프랑스

- IMF, 프랑스 재정위험 확대 및 중기 재정건전화 지연 우려 제기
- 프랑스, 1분기 경기 위축 및 중동 전쟁 비용 확대로 재정적자 감축 난항
- 금리 상승으로 프랑스 재정 여력 축소 우려

06 중국

- OECD, 중국 중심 산업보조금 확대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 제기

국제기구

01 OECD

- OECD,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 발표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

02 IMF

- 국제통화기금, 지경학에 대한 재고찰

주요국
동향5.12. | 미 인플레이션, 3년 만에 고점 근접 및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우려¹⁾

- 미국 노동부 통계국(BLS)이 5월 12일 발표한 자료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3월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최근 약 3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다시 꺾였다는 평가가 제기
 - 로이터는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4월에도 에너지·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세 구조가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 로이터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4월 CPI가 에너지·교통·주거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상승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 통화정책 완화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
- 물가 재상승은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를 크게 제약
 - 월가는 이란 전쟁·에너지 가격 상승·관세·재정지출 확대가 중첩되며 2026년 내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전망하였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첫 금리인하 시점을 연말 이후로 늦춰 잡고 있다고 분석
 -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채권·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준 인사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채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재상승하면서 연준의 여지를 제약
 - 종합하면, 3~4월 미국 내 물가 재상승은 이란 전쟁·유가·관세·재정 확대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적 충격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과 언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연준의 통화완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

5.18. | 이란전쟁으로 기업들은 비용증가, 공급망차질, 운영방식의 변화에 직면²⁾

- BBC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와 연방정부 재정에는 부담을, 방산·에너지 등 특정 업종에는 전쟁 특수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양극화가 확대됨을 지적³⁾
 - BBC는 전 세계 가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동안, 일부 기업은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해상 운송 차질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 운송·제조·소비재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5월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

1) <https://www.reuters.com/business/us-consumer-inflation-expected-have-increased-further-april-amid-iran-war-2026-05-12/>
<https://www.reuters.com/markets/us/iran-war-stasis-brings-us-inflation-expectations-back-boil-2026-04-30/>

2)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iran-war-saddles-global-companies-with-25-billion-bill-counting-2026-05-18/>

3) <https://bbc.news1.kr/news/articles/cyv2q16qgjmo>

- 반면, 석유·가스 메이저와 방산 기업, 일부 원자재·운송 기업들은 전쟁 특수에 따른 높은 이익이 발생하며, 전쟁이 기업·산업 간 격차와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
-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후 약 3개월 동안 미국·유럽·아시아 상장사 최소 279개 기업이 전쟁에 따른 재정 충격 흡수를 위한 각종 조치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
 - 해당 기업들은 가격 인상, 생산 축소, 배당·자사주 매입 중단, 직원 무급휴직 권고, 정부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규모는 최소 250억 달러(약 37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⁴⁾
 - 특히 항공업계의 전쟁 관련 추가 비용이 약 150억 달러로 추산되며, 맥도날드 등 글로벌 소비자 기업들도 공급망 차질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인 비용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
 -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세 둔화로 인해 가격 결정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 2분기 이후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려는 연쇄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이미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
- 이상을 종합하면, 지난 2개월간 이란 전쟁은 미국과 글로벌 기업에 최소 수십억~수백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일부 에너지·방산 기업에는 이익을 안겨 주며 산업별·계층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고, 이러한 비용·가격 구조 변화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심리와 통화정책, 소비·투자 결정 전반에 있어 복합적인 압박으로 작용

6.9. | 5월 기존주택 거래 반등, 그러나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에 묶인 미국 주택시장⁵⁾

- 전문가들은 5월 들어 기존주택 거래가 예상보다 높며 미국 주택시장이 부분적인 회복 신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와 높은 집값이 거래 회복과 신규 수요를 제약하며 향후 1~2년 동안은 제한적인 거래와 완만한 가격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6월 8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5월 기존주택 거래(Existing home sales)는 전월 대비 3.2% 증가한 417만 호(4.17 million units)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
 - 5월 기존주택 거래는 4월 대비 3.2% 증가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매물 부족이 완화되고 거래가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
 - 다만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와 제한된 매물이 주택시장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금리 수준이 과거 평균치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첫 내 집 마련 수요와 이사 수요를 동시에 억제
- 한편, 6월 11일 공개된 로이터 설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2027년까지 주택시장의 거래를 억누르고, 가격 상승률도 완만하게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⁶⁾
 - 전문가들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당분간 약 6.4% 수준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높은 금리와 이미 오른 집값이 향후 1년 동안 주택구매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
 -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19명 중 약 3분의 2는 향후 1년간 주택 구입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높은 모기지 금리와 높은 주택가격은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구매 제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

4) <https://www.jordannews.jo/Section-111/All/25-Billion-in-Losses-for-Global-Companies-Due-to-Iran-War-51493>

5) https://www.tradingview.com/news/reuters.com,2026:newsml_L1N42GOR0:0-us-existing-home-sales-increase-more-than-expected-in-may/

6) <https://money.usnews.com/investing/news/articles/2026-06-11/high-us-mortgage-rates-to-keep-housing-market-subdued-reuters-poll>



5.21. | 유럽연합 집행위, 중동 분쟁 여파로 독일 경제성장을 둔화 및 물가상승 전망⁷⁾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독일 거시경제 지표를 조정
 - 2025년 0.2%의 낮은 성장에 이어 2026년 0.6%, 2027년 0.9%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2026년 3월 발생한 중동 분쟁 쇼크로 인한 연료 가격 급등이 경제 회복 흐름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부문별 경제 동향 및 경기 진단
 - 민간 소비 및 투자의 경우, 2026년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으나, 2027년에는 실질 임금 상승과 불확실성 완화로 다소 회복될 전망
 - * 물가상승률: 2025년 2.3% → 2026년 2.9% → 2027년 2.7%
 -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과의 경쟁, 지정학적 우려로 수출 지향형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수출이 3년 연속 감소 후 정체 국면
 - 경상수지 흑자 폭은 GDP 대비 4%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은 경기 침체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보건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의 고용 확대로 전체 실업률은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
 - * 실업률: 2025년 3.8% → 2026년 4.0% → 2027년 3.9%
- 국방비 증액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합의된 부채 준칙(Debt Brake) 개혁으로 공공지출 확대가 본격 가속화
 - * 특히 군사 장비 도입 등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가 가용 재원을 압박
 - 가계·기업 대상 세제 혜택 조치로 인해 세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지출은 급증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2026년 3.7%, 2027년 4.1%까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경고
 - *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 2025년 -2.7% → 2026년 -3.7% → 2027년 -4.1%
 -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5년 63.5% → 2026년 65.8% → 2027년 68.0%

5.27. | 독일 경제자문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026년 경제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⁸⁾

- 독일 정부의 독립 경제 자문기구인 경제자문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는 최신 정례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
 - 경제자문위원회는 독일의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0.9%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함
 - * 경제자문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1963년에 설립된 경제학자 그룹으로,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연방정부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5년 임기로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7)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member-states/country-pages-including-country-reports/germany/economic-forecast-germany_en

8)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economic-council-cuts-growth-forecast-energy-prices-bite-2026-05-27/>

- 이는 이란 전쟁 등 중동 분쟁 쇼크 장기화에 따른 고에너지 가격 지속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독일 제조업 전반에 가한 충격을 반영한 결과
- **고물가 고착화 및 민간 부문 침체 진단**
 - 자문위원회는 가스 및 유가 등 수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
 - 실질 임금 회복 속도가 지연됨에 따라 가계의 민간 소비 심리 위축 지속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 및 인프라 투자 부진 심화
- **재정 운용 제약 및 대내외 리스크 확산에 따른 정국 불안**
 -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상 부채 준칙 규정 준수를 둘러싼 정계 내 갈등이 예산 편성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독일 경제의 구조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 인프라 투자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

6.2. | 독일 연방고용청, 노동시장 악화로 2026년 8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 직면⁹⁾

- 독일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BA)은 하반기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제출 보고서에서 재정 위기를 경고
 - BA의 2026년 재정적자는 80억 유로(약 93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초기 예산 계획상의 적자 규모인 약 40억 유로 미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임
 - 최근 독일 거시경제 전망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고, 노동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수지 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
- **재정 부족액 보전과 연방정부 차입 가능성**
 - 실업보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BA는 자체 재원으로 재정 결손을 메우지 못해 연방정부의 공공 차입을 통해 자금을 수급해야 하는 상황
 -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차주 회의를 소집하여 BA의 재정 전망 및 정부 지원 대책을 공식 논의할 예정
- **2030년까지의 중장기 경제·고용 전망 악화**
 - 노동시장 왜곡이 장기화되면서 2030년까지 BA의 누적 부채가 약 230억 유로 규모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
 - 정부의 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2030년 한 해에만 27억 유로 규모의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당초 정부가 가을 전망에서 2030년까지 실업자 수가 274.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현재 기준으로는 282.8만 명까지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9)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labour-agency-faces-over-8-bln-euro-deficit-2026-report-says-2026-06-02/>



5.21. | IMF, 프랑스 재정위험 확대 및 중기 재정건전화 지연 우려 제기¹⁰⁾

-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높은 국가부채로 인해 향후 시장 압력과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
 - 프랑스의 2025년 공공재정 적자는 GDP 대비 5.1%로 낮아졌으나, 현재 정책만으로는 2029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려는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
 - IMF는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부채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며, 향후 더 큰 폭의 지출 삭감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경고
- IMF는 고령화, 국방 지출 확대, 에너지 전환 비용 등이 이미 높은 프랑스 공공지출 부담을 추가로 압박할 것으로 분석
 - 프랑스의 공공지출은 2025년 GDP 대비 57.5% 수준으로 집계
 - 2026년 성장률은 지정학적 긴장과 2027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
 - IMF는 연금제도, 실업급여, 보건·교육 지출 효율화 등을 포함한 다년도 재정전략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

5.29. | 프랑스, 1분기 경기 위축 및 중동 전쟁 비용 확대로 재정적자 감축 난항

-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로 나타나 기존 예비치였던 0.0%를 하회¹¹⁾
 - 수출은 전분기 0.9% 증가에서 1분기 3.5%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항공 부문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프랑스 성장의 전통적 동력인 가계소비도 에너지 소비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0.3% 증가에서 1분기 0.2% 감소로 전환
 - 2026년 1분기 실업률은 8.1%로 상승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10)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france-faces-rising-fiscal-risks-imf-warns-2026-05-21/>

11) <https://www.reuters.com/business/french-economy-shrank-by-01-first-quarter-2026-0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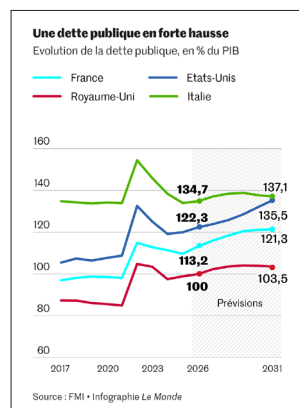
- 프랑스의 1분기 공공재정 적자는 GDP 대비 5.1%로 유지되었으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2026년 재정적자 목표인 GDP 대비 5.0%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¹²⁾
 - 2026년 1분기 세입은 40억 유로 감소한 반면, 공공지출은 20억 유로 증가
 - 중동 전쟁 관련 비용은 당초 4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로 상향되었으며, 향후 100억 유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3.2%에서 3.6%로 상승했으며, 5월 중순에는 4%에 근접해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
 - 프랑스 정부는 전쟁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동일 규모의 지출 절감으로 상쇄한다는 방침 아래, 약 62억 유로 규모의 절감 조치를 제시

6.8. | 금리 상승으로 프랑스 재정 여력 축소 우려¹³⁾

- 르몽드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국가 재정적자 확대,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주요 선진국 전반의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재정 운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
 - 프랑스 재무청(Agence France Trésor)은 6월 4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36년 만기(10년물) 국채 92억 유로를 발행했으며, 이때 투자자들이 요구한 금리는 3.8%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월 19일 5.2%에 근접했으며, 영국은 5.8%, 일본은 4.0%까지 상승하는 등 주요 산업국 전반에서 장기금리 상승세가 나타남
- 금리 상승은 프랑스의 이자 비용 증가와 성장 둔화를 동시에 유발해 재정적자 감축 경로를 제약할 가능성 존재
 - 중동 전쟁에 따른 성장 둔화와 세수 감소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추가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프랑스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연초 1.1%에서 0.6%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자를 약 0.3%p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1년 GDP 대비 1.1%(360억 유로)에서 2026년 2.4%(740억 유로)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GDP 대비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림 1>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림 2> 주요국 공공부채 비율 전망

12)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5/29/budget-la-guerre-stoppe-la-baisse-du-deficit-et-complice-la-tache-de-sebastien-lecornu_6694702_823448.html

13)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6/08/l-envolee-des-taux-d-interet-etouffe-les-marges-de-manuvre-budgetaires-des-pays-industrialises_6699419_3234.html



5.21. | 영국 서비스업 활동 지수,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 기록¹⁴⁾

-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조사 결과, 영국 서비스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
 - 5월 종합 산출 지수(Composite Output Index)는 48.5를 기록하며 전월(52.6) 대비 하락, 시장 예상치(51.6)를 하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영국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침체는 하반기 GDP 성장률에 심각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독일 베렌베르크(Berenberg) 은행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PMI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1분기 성장률(0.6%)의 기저효과가 소멸하고 2분기 GDP 성장률이 -0.2%로 급락할 가능성 경고
-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의 리더십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란 전쟁 여파가 복합적 악재로 작용
 -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 공급망 부족, 고용 감소 등 기업들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수준의 경영 환경에 직면
 -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려 기업 투자와 가계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고용 동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민간 부문 고용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와 제조업-서비스업 간 경기 양극화 심화
 - 서비스업계의 급격한 감원 조치로 인해 민간 부문 급여 수급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세
 - * 지난 4월 영국의 정기급여 수급자가 10만 명 급감했다는 영국 연방통계청(ONS)의 공식 데이터와 일치
 - 반면 제조업 부문은 국제 해운 물류 지연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혼조세
 - * 향후 추가적인 가격 인상과 공급 마비를 우려한 고객들의 '주문 앞당기기(FRONT-LOADING)' 기저효과로 분석
 - 다만 영국산업연맹(CBI)은 제조업의 단기 반등 또한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 제조업체들의 주문 잔량이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향후 3개월간 수요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 경기 위축 징후 확산에 따라 영란은행(BoE)의 6월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은 다소 완화될 전망
 - 5월 PMI가 보여준 경제활동 둔화는 물가 상승압력 억제 요인으로 작용, 6월 통화정책 위원회에서 현재의 기준금리(3.75%)를 동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 주요 기관들은 4월 물가상승률(2.8%) 및 임금상승률(3.4%) 둔화에 이어 선행지표 악화까지 확인됨에 따라, 영란은행이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평가

14)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6/may/21/uk-service-sector-activity-slumps-in-one-of-sharpest-declines-for-a-decade>

6.2. | 영국 예산책임청, 2026년 6월 예측 평가 보고서 발표 및 재정 리스크 경고¹⁵⁾

- 2024-2025 회계연도 재정 예측치와 실제 실적치(outturn)의 격차 요인을 분석
 - 과거 전망과 달리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장기 고금리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 심화
 - 예산책임청(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은 이번 분석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 등 대외 충격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연쇄 리스크를 모형에 반영해 나갈 계획
- 에너지 충격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영국의 긴축 환경 및 국채 이자 부담을 가중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임금상승을 자극하며 예상보다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실적치 4.9%, 전망치 3.5%)를 유발
 - 고물가 여파로 실질 GDP 성장은 둔화되었으나, 세수 기반이 되는 명목 GDP는 물가상승 착시로 인해 과거 전망치를 상회하는 왜곡이 발생
- 2024-2025년 재정 적자(순차입)는 1,520억 파운드로 과거 예측을 대폭 초과
 - 실제 재정적자는 1,520억 파운드(GDP 대비 5.2%)를 기록하며, 과거 OBR 예상치(850억~870억 파운드)를 650억 파운드 이상 초과함
 - 물가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및 복지 지출 급증, 그리고 2024년 가을 예산안의 정부 부처별 지출(DEL) 증액이 재정 악화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
 - 세수 측면에서는 소득세와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수입이 증가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공지출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명목 GDP 확대로 전체 국가부채 비율은 하락했으나, 실질 채무 리스크는 여전히 최고조
 - 공공부문 순부채 실적치는 GDP 대비 93.2%로 전망치보다 낮아졌으나, 이는 부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분모인 명목 GDP가 커진 '착시 효과'에 불과
 - 영란은행 착시를 제외한 전임 정부의 재정 준칙 지표인 '순 공공부문 부채(public sector net debt ex BoE)'는 팬데믹 정점을 넘어서며 매년 상승세를 기록, 영국의 구조적 부채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6.8. | 영국산업연맹,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2026년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및 실업을 상승 경고¹⁶⁾

-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은 최신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고용시장 악화를 예고
 - CBI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 수준 저하가 영국의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

* 루이즈 헬렘(LOUISE HELLEM) CB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충격이 영국의 저성장 스토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최근의 대외 충격이 없었다면 보다 긍정적인 경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orecast-evaluation-report-june-2026/forecast-evaluation-report-june-2026#foreword>

16) <https://www.reuters.com/world/uk/uk-employers-warns-slower-growth-higher-unemployment-2026-06-08/>

- 부문별로는 실질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 실업자 수는 상향 조정, 기준금리는 동결로 전망
 - CBI는 영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26년 1.1%, 2027년 0.9%로 전망하며, 지난 12월 예측치 대비 각각 0.2%p, 0.6%p 하향 조정
 - 노동시장은 실업자 수가 200만 명까지 증가하여 실업률이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기존 전망치인 5%에서 0.5%p 상향 조정한 수치로, 2015년 중반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
 - 또한 영란은행(BoE)이 물가상승률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3.75%)를 2027년까지 동결할 것으로 전망
- CBI 대표는 기업을 대하는 영국 정부의 태도 개선을 강력 요구
 - 레인 뉴턴-스미스(Rain Newton-Smith) CBI 사무총장은 스타머 총리 정부를 향해 “기업을 단순히 수도 꼭지 자금원(a cash tap)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라고 발언
 - 현재 전체 조세 수입에서 기업들이 기여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재정 확보를 위한 과도한 기업 부담 가중이 민간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5.19. | 내각부, 2026년 1분기 GDP 속보치 발표¹⁷⁾

- 2026년 1~3월 GDP 속보치 결과, 소비는 예상대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세를 유지함
 -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5% 증가, 연율 환산 시 1차 속보치 2.1%에서 2차 1.8%로 하향 조정
 -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3%로 5분기 연속 증가, 기업 설비 투자는 2차 발표에서 -0.7%로 감소 폭이 확대
 - 아울러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면서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기여
- 정부는 투자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 원칙을 준용함
 - 잠재적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위기관리 투자’와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 투자’ 등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추진
 - 국민 생활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며,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 ‘강한 일본 경제’를 실현
- 단기 경제 전망으로는 고용 및 소득 여건의 개선과 정부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향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주요 위험 요인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주시함
 - 유가 안정 대책으로 연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즉각 시행하며, 원유의 대체 조달과 비축유 방출을 통해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
 - 물류 및 자재 관리는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활한 유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17) Cabinet Office, “Statement by Minoru Kiuchi, Minister of State for Economic and Fiscal Policy On the Release of the 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January–March 2026 (First Preliminary Estimates)”, https://www5.cao.go.jp/keizai1/260519_statement.pdf

- **향후 재정 운용 계획으로 에너지 비용 지원과 추가 재정 조치 등을 검토함**
 - 에너지 비용 지원으로서 총리는 여당에 7~9월 기간의 전기·가스 요금을 지난 여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
 - 추가 재정 조치 검토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재무장관에게 보정예산(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적 준비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
 - 정부는 중동 정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 동향이 가계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밀착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고 적절한 경제·재정 운용을 지속해 나갈 방침

5.22. | 총리실, 제7차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성장력 강화와 사회보장 논의¹⁸⁾

- **성장력 강화에 대해서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에 관한 프레임에 대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 기금 등 복수년도 예산에 의한 투자 촉진책을 강화하는 것, 전략 분야 전체를 포트폴리오로서 파악해 상황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실시하는 것 등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쉽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년도 예산 조치액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금액이 확보되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제시
 -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의 관점을 근거로 재검토
 - 보조금·세제 등의 지원에 더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제도 개혁,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등 종합적인 대처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정돈해 나갈 예정
- **사회보장에 관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사회보장 부담률 목표에 대한 검토 진행, 물가·임금 상승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면서 AI 등의 혁신을 활용하여 예방 의료를 추진하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 전 세대 사회보장 부담률 목표 검토와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고령자’ 정의 재검토 진행
 - 노동 공급 제약이 강해지는 가운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나 AI·로보틱스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지속 가능한 재정과 질 높은 전 세대형 사회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보장 개혁강화 제시

18)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Meeting of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https://www.kantei.go.jp/jp/105/actions/202605/22keizai.html>



6.1. | OECD, 중국 중심 산업보조금 확대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 제기¹⁹⁾

- OECD는 15개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
 - OECD의 MAGIC 데이터베이스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지원액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수령한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융지원 등을 추적
 - 중국의 2024년 15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업 매출 대비 1.3%, 총 1,08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
 - 중국 기업은 2005~2024년 OECD 국가 기업 대비 평균 3~8배 높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전략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연결되나,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제기
 - OECD는 2005~2024년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분 중 보조금이 설명하는 비중이 전 세계 평균 22%였으며, 중국 기업의 경우 약 60%에 달한다고 분석
 - 보조금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불공정 경쟁우위와 과잉공급을 초래해 글로벌 시장 왜곡 및 통상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 정책성 재정지원은 대내적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나, 대외적으로는 무역 불균형과 보호무역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부각



19) <https://www.reuters.com/world/china/global-subsidies-rebound-especially-china-oecd-says-2026-06-01/>

국제기구
동향5.27. | OECD,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 발표²⁰⁾

- OECD는 「Restoring Public Finances: Enabling Effective Government」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이 고령화, 보건의료 수요 증가, 국방 지출 확대,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
 - OECD 회원국의 공공부채는 2007년 GDP 대비 73%에서 2024년 약 110%까지 상승
 -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지출은 2020년 GDP 대비 1.9%에서 2025년 3.3%로 증가
- OECD는 회원국들이 2025~2026년 예산에서 지출 절감과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조정 규모는 중장기 재정 압력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
 - 사회보장 및 보건 지출은 OECD 회원국 공공지출의 51%를 차지하며, 약 90%의 회원국이 해당 분야에서 절감 또는 효율화 조치를 추진
 - 주요 조치로는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강화, 건강보험·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급여 수준 및 수급자격 재검토, 소득·자산 기준 강화 등이 포함
 - 정부운영 부문에서도 약 80%의 회원국이 공공부문 인력·보수 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조달 효율화 등을 추진
- OECD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하고, 중기재정관리·지출검토 등 예산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세입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세율 인상보다 특정 세율 인상,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축소, 개별소비세 조정 등이 주로 활용
 - 의무지출과 조세지출은 일반 예산보다 통제와 점검이 어려운 만큼, 중기 재정전망과 지출검토 과정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

6.3.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²¹⁾

- OECD는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을 통해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이라고 평가
 - 에너지 공급 차질이 단기에 그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5년 3.4%에서 2026년 2.8%로 둔화된 뒤, 2027년 3.1%로 회복될 전망
 - 다만 공급 차질이 2027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세계 성장률은 2026년 2.1%, 2027년 1.8%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

20) OECD (2026), Restoring Public Finances: Enabling Effective Gover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bcf9161-en>.

21) OECD (2026),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 Under Pressu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d1956f0-en>.

- OECD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감세, 가격 규제 등은 단기적으로 가격과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광범위하게 운영될 경우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
 - 이에 따라 지원은 취약가격과 피해기업 중심으로 선별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 시 자동 종료될 수 있도록 일몰 장치를 마련할 필요
 - OECD는 각국이 단기 충격 대응과 함께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 에너지 공급 다변화, 공공부문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 한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 한국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GDP의 1%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유류세 인하 등 가격·기업·지방정부 대상 지원을 추진
 -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6년 2.6%로 높아진 뒤 2027년 1.9%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OECD는 에너지 가격 지원, 가격 규제, 수출통제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취약계층·피해기업 중심의 선별지원과 지속가능한 중기 재정 운용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6.2. | 국제통화기금, 지경학에 대한 재고찰²²⁾

※ IMF「FINANCE & DEVELOPMENT」2026년 6월호는 '지경학(GEOECONOMICS)'을 특집 주제로 다루었으며, 편집장의 서신을 요약함

- **경제정책이 곧 국가안보가 된 세계, 강대국들의 참여로 새로운 지경학적 셈법 시작**
 -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냉전 종식 이후 상생을 추구하던 국제 관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 관세, 제재, 수출통제 등을 적극 도입
 - 경제와 안보의 결합으로 경제정책과 국가안보 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경학적 셈법'이 자리
 -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등의 지역에서 지경학은 오랜 비즈니스 방식이었으나, 최근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이 흐름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면서 글로벌 파급력이 극대화
- **지경학적 권력으로서 초크포인트(Chokepoint)의 통제는 과도한 권력 행사의 부작용,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한계를 가짐**
 - 금융 인프라, 첨단기술, 핵심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이 거대한 권력의 원천
 - 이러한 지경학적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할 경우, 상대국들이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영향력마저 스스로 약화하는 자멸적 결과를 초래
 - 경제적 강압 조치는 전 세계적인 효율성 저하, 혁신 위축, 대외 신뢰도 상실, 나아가 국내 결속력 저해라는 비용을 수반
- **공통된 핵심은 회복력(Resilience)도 중요하지만, 절제력(Restraint) 또한 필요**
 - 과도한 의존은 취약성을 낳지만, 반대로 과도한 파편화는 국제 협력이 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
 - 가능한 한 다양화와 협력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것은 공동의 약속
 - 지경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세계에서 국가들이 안보, 성장, 영향력을 추구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
 - 정책 입안자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사고방식을 현실 경험에 맞춰 발전시키고 이러한 변화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존재

2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Geoeconomic Calculu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issues/2026/06/editor-letter-the-geoeconomic-calculu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

06

2026 June

| 재정 |



기획예산처, 정부출범 1주년 핵심성과 보고 (기획예산처 5.20.)

-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5월 20일(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
 - 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 회복 뒷받침: 재정의 적기대응('25년 2차 추경)으로 정부 출범 직후 성장을 반등('25년 상반기 0.3%→하반기 1.7%), '26년 중동전쟁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29일 소요, 과거 평균 70일)
 - ②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강화: '26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27.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 단행,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25년 역대 최대 건수(992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③ 국민 참여·지방 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 국민참여 예산 국민제안 2배 이상 확대('25년 517건→'26년 1,09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 3배('25년 3.5조 원→'26년 10.6조 원) 확대 등
-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소관 국정과제(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등 기획예산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기획예산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 6.8.)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8일(월)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 및 부처·지방정부 등 100여 명과 함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이어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최초로 주관하는 공론의 장으로, 지난 4월 '나라살림 타운홀미팅', 5월 '청년 라이브톡'에 이어 기획예산처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타운홀 미팅
- 이번 행사는 올해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시작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지출구조조정 과정까지 확대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

- 특히 이번 열린 토론회는 부처·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일반 국민, 청년자문단 등 참석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소통의 폭을 대폭 강화
- '27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예산실장의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①사회·교육·문화 분야, ②경제 분야, ③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 등 총 3부로 나누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들은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들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 가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
- 박홍근 장관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하여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 경제 |



2026년 6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재정경제부, 6.12.)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심리 개선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요인이 지속
- (실물경기) '26년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0.6% 감소, 광공업(▲0.7%), 서비스업(▲1.0%), 건설업(▲1.4%) 모두 감소, 설비투자(▲3.6%), 소매판매(▲3.6%) 등 내수 관련 지표 부진
- (대외부문) '26년 5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53.2% 증가,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동월비 60.7% 증가
- (심리지표) 소비자심리(CSI 106.1) 및 기업심리(CBSI) 실적·전망 모두 상승
- (경기지표) '26년 4월 동행지수(+0.2P), 선행지수(+0.6P) 상승 →경기 회복 신호
- (고용·물가)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0만 명 감소, 실업률 2.9%(+0.1P), 소비자물가 3.1% 상승, 생활물가 3.3% 상승 등 물가 상승세 확대
- (금융·자산시장) 주가, 국고채 금리, 원/달러 환율 상승, 주택 매매 및 전셋값 상승 지속
- (종합) 수출 중심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용 둔화가 병존함에 따라 정부는 비강경제 대응체계 유지,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할 계획

1월

|재정|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경제|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재정|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재정|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외결 확정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경제|

-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재정|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7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IMF 경제위기 대응’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나섰으며, 공공·금융·기업·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재정정책은 위기극복과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그러나 시장중심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은 지난날 고도성장기 이래로 우리사회에 체화(體化)되어 왔던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사회경제를 지양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온존·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수행한 구조적 역할을 규명해본다.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도입부

국민의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태에서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어느 정부나 새로운 정부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당시 정부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정책 기조 내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펼쳐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와도 달리 IMF라는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면서 제시한 ‘경제프로그램’의 이행이라는 외적인 조건 속에서 출범하였던 관계로 정부의 각오와 대응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먼저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국정과제를 수립함에 있어 지난 역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물려받아 지양해야 될 유제(遺制)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확립”에서 찾고 있었으며(대한민국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

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 1998, 19), 이러한 인식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키는 것을 “국민의 정부의 기본철학”으로 정립하였다(같은 책, 51). 이와 같은 인식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유와 엄격한 자기 책임, 시장경쟁을 통한 보상, 균등한 기회의 보장,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시장개방을 기본원칙으로 공공부문·금융·기업·노동 4개 분야의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같은 책, 67)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4대부문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바로 이와 같은 국민의 정부 기본철학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행된 ‘공공부문’의 개혁에서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기초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금융부문’ 구조개혁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금융기관도 기업처

럼 “영리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혁해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기업부문’ 구조개혁에서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가는데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에서도 고용 조정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갔다.¹ 한편 이와 같은 4대부문 개혁과제들이라는 것도 대부분 재정정책 측면에서 물질적 뒷받침하에 비로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의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강제력에 바탕을 두고 조세의 징수와 세출 활동을 해나가면서 기업의 축적행태(양식)를 비롯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행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선도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반 정책들이 추구하는 성과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같이 전대미문의 IMF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나아가 “21세기 경제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기획예산위원회,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1998, 7)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정책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생산적인 경제행태를 선도해내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재정정책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을 유념하면서, 국민의 정부 시기 재정정책을 비롯한 제반 정책이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 질서의 틀을 구축하는데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재정정책의 전개와 사회경제적 귀결

1. 재정정책의 전개와 재정적 성과

이하에서는 먼저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권을 획득한 국민의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제시하였던 재정정책의 기초와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 개혁의 내용을 개관해보고, 이어서 그러한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행된 재정정책운영의 재정적 성과를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와 세입 및 세출 구성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추이를 통해서 살펴본다.

(1) 재정정책 기초와 제도개혁

1) IMF 경제 프로그램과 재정정책 기초

IMF는 우리 정부와 구제금융을 타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행해나갈 경제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² 이 프로그램에는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통화 및 환율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개혁 등 여러 부문에 전방위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 본고의 주제인 재정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금융부문의 고이자율정책과 더불어 재정 면에서는 무엇보다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를 늘리고 경상지출과 순융자를 줄이며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도 줄이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IMF의 요구조건에 직면하여 우리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적

1.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이와 같은 4대부문 구조개혁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같은 책 제3부, 그리고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 『국민의 정부 5년 국정자료집』 2. 경제, 2003. 제3편을 참고 바람.
2.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IMF와 대기성(Stand-by) 차관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1년 8월 23일 모두 상환하여 IMF로부터 졸업하기까지 10여 차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합의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IMF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차관을 제공하면서 차관 상환의 보증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행해 나갈 ‘경제프로그램(Economic Programs)’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긴축적인 정책 기조와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의 수행과 더불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고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커가는 양상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서 적자재정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으며, IMF도 이러한 사정에 공감하여 급기야 1998년 5월 2일 협상에서는 1.75%의 재정적자를 허용하였으며, 동년 7월 24일 협상에서는 경제활동 지원 및 사회안정 강화를 위해 19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GDP 대비 4%의 적자 규모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정부는 1998년 9월 16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담아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9년 3월 10일 협상에서는 1999년도 예산에서도 GDP 대비 5%까지의 재정적자를 허용하면서, 우리 정부는 1999년 들어서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이 과정에서는 1998년에 이어 적자재정기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정책수행으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면서 2000년부터는 다시금 흑자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전반기와 후반기 이후 시기에 재정 정책적 대응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바, 이하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 기조 변화추이를 염두에 두고 구상하고 실행해나간 재정제도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도개혁 구상과 실행

재정제도 개혁 내지 혁신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기획예산위, 1998)’나 ‘경제청사진(대한민국정부, 1998)’에서 명시적으로 독립된 주제로 다루지 않고 공공부문 내지 정부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다른 부문의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재정 활성화 등 결과지향형 예산의 운용,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 나아가 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력,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세제면에서 재산 과세 강화,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공평한 세제를 추구하며, 유사세목 통폐합 등을 통해 세제 간편성을 높이고, 나아가 근거과세 확립 등 세정개혁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의롭고 투명한 세제와 세정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기획예산위원회, 전게서, 36-37; 대한민국정부, 전게서, 127-135). 아울러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안정망을 확충해나가고(대한민국정부, 전게서, 81), 특히 자활·자립기반에 바탕을 둔 생산적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복지서비스 다양화 등 민간복지 활동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대한민국정부, 전게서, 311-321).

이러한 개혁과제는 상당 부분 실제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먼저 1999년도와 2001년도의 2차에 걸쳐 「기금관리기본법」을 제·개정하여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기

3. Wang Y. and H. Zang(eds.),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KIEP, 1998, 47 및 황상안·왕윤중·이성봉,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층보고 II 1998.7-199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9-51 등을 참고.

금관리제도를 개혁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9년 4월에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하였으며,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방만한 정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차츰 그 실시범위를 넓혀나갔다. 이 외에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전술한 4대 부분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재정개혁과제를 이행해나갔다(당시 추진되었던 재정개혁의 제도적 성과는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2002, 212-251 참고). 아울러 이와 같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대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는 바, 실제로 2002년 연말까지 목표로 하였던 11개 민영화 대상 모기업 중에서 국정교과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8개 기업을 민영화하였다(기획예산처, 같은 책, 82-95). 뿐만 아니라 1998년에서 1999년에 걸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를 확충하였으며,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제도도 확충하였다.

(2) 재정정책 운영과 재정적 성과

1)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먼저 국민의 정부는 중앙정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통합재정기준으로 볼 때 재정규모는 문민정부 시기 줄곧 GDP 대비 17.0%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19.3%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아 집권 첫째 1998년

에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대폭 경비 수준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22.4%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1999년부터는 다소 진정추이를 보여 1999년에는 21.5%, 2000년 21.0%, 2001년 20.3%,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18.2%로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재정규모가 낮아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이를 보고 당시 재정규모가 이전 문민정부 시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정규모의 증가 추이는 GDP 대비 상대적 비중을 보인 것으로서, 재정규모 자체만 보면 전년 대비 1997년 재정규모 증가율이 18.6%이었던데 비해 1998년에는 오히려 크게 낮아진 15.1%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듬해 1999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5.1%, 2000년에는 7.3%, 2001년 4.3%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2002년은 -0.9%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재정규모가 전년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까지 노정되고 있었다.⁴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재정규모 팽창여부는 GDP 대비 비중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민의 정부 시기는 이전 문민정부 시기 경제위기국면에 접어들었던 1997년 19.3%를 제외하면 17%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수지 면에서는 1993년을 기점으로 문민정부 시기 줄곧 0.5% 전후 수준의 약간의 흑자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해오던 통합재정수지가 1997년 -1.1% 적자로 돌아서고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3.4% 수준까지 적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⁵ 그러던 것이 1999년 -2.2%를 마지막

4. 이러한 재정규모 증가 추이는 중앙정부 공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중앙정부 공공부문 통합재정기준 규모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과 같은 자료 참고).

으로 2000년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 1.2%, 2001년에도 1.5% 수준을 보였던 것이 2002년에는 3.6% 수준까지 높은 흑자를 보였다.⁶

<표 1>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1998년 재정규모의 GDP 대비 비중이 22.4%로 높아졌을 때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19.1%에 지나지 않았지만, 1999~2002년 기간 재정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21.5%, 21.0%, 20.3%, 18.2% 수준을 보이고 있었던 데 비해,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19.3%, 22.2%, 21.8%, 21.8% 수준으로 재정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었던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1999년 이래 정부의 강력한 경기회복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실질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세외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표 3> 참고).

2) 세입·세출 구성의 변화추이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와 같은 재정운영의 총량적 재정 성과만 가지고는 재정운영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의를 파악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총량적 성과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의 변화추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입과 세출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재정정책운영에 담겨있는 사회경제적 의의의 일단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세입 구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추이를 살펴보자. <표 1>을 보면 1999년 이래로 재정규모 증가율에 비해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더 컸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재정지출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재정수입은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9년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 이래로 2000년부터는 큰 폭으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부터는 그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었다(<표 3>).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는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문민정부 시기 15%대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 1998년 15.6%, 1999년에는 16.0%로 올라가고 2000년에는 17.9%로까지 올라간 후, 그 이후로 17%대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도 종전에 2%대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 1998년, 1999년에는 3.3%, 3.1%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그 이후로는 4%를 넘어서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세수입이 총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종전에 80%를 훨씬 넘어섰던 것이 차츰 떨어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998년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최고치를 보인 이후 이듬해 줄어들고 2000년 이후로 흑자를 보이게 된 것은 그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조세부담물의 제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처음에 IMF가 제시한 '경제프로그램'에서는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도, 이와 같은 적자재정의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IMF와의 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음을 참고하기 바람(앞의 '재정정책기조' 부분 참고)

6. 이러한 재정수지 변화추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개지를 포함한 중앙정부 공공부문의 통합재정 기준 재정수지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실적치는 1997년 -1.4%, 1998년 -3.7%, 1999년 -2.4%, 2000년 1.1%, 2001년 1.1%, 2002년 3.1%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기재부, 『201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4, 24).

다음으로 세출 구성 측면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 통합 재정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보장 복지 부문의 구성비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일반공공행정 부문의 비중 또한 1999년을 저점으로 그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이전 정부들에 비해 문민정부 시기 크게 줄어들었던 국방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국민의 정부 들어 더 큰 비중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부문의 상대적 비중도 크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사업 부문은 1998년과 1999년 종전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2% 전후 수준으로 높아지던 것이 2000년 이후로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2년에는 큰 폭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보장 및 복지 부문의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유

례없는 경제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4대 공적 보험의 적용대상을 확장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세출 구성면의 특성은 <표 3>의 경제적 분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바, 경상지출 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1998년에 61.8%를 저점으로 해서 해마다 비중을 큰 폭으로 높여갔으며,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년에는 80%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능별 분류의 사회보장 복지 부문과 일반공공행정 부문의 높은 비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본지출의 비중은 1999년에 큰 폭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지만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2년에 큰 폭으로 높아지는 등 진폭을 거듭하면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와 유사한 비



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본지출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상경비 비중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순용자의 비중이 1998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상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사회보장 부문의 확충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과 이자보전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가 경상적인 세출요인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특성

앞에서는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의 변화추이와 나아가 세입과 세출 구성 측면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 구성의 변화는 사회경제실태의 일단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총량적인 재정규모나 재정수지 자체에 비해 분석의 사회경제적 실익이 없지 않으나, 더 중요하기로는 그와 같은 구성의 이면에서 실제 현장에서 지출이 행해지고 수입이 징수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 내지 기업과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 제 부문에 어떻게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하는지, 즉 재정활동의 구조적 특성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재정정책은 그 자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에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을 비롯한 다른 주요 정책의 수행에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영역으로서, 이들과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동기에 이질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IMF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금융부문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수행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조적 특성, 즉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정책적 유인구조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부동산의 보유와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더불어 규명해보고자 한다.⁷ 특히 여기서는 하나의 정책이 그 정책수행 대상으로서 경제주체의 행동에 어떻게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지는 관련 법규에 잘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하 논의에서는 당시 개별 정책의 내용을 규정짓고 있던 관련 법규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⁸

(1) 금융개혁(구조조정)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4대부분 개혁 중에서 경제위기적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시 경제주체들의 축적 행태를 비롯한 경제(생활)행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금융부문 개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금융개혁이라는 것은 곧바로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금융을 통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당시 금융개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적자금의 조달과 운용과정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그것은 재정에 의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7. 우리는 앞에서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도 제도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을뿐 아니라 세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도 크게 높아지는 등 재정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문이기는 하나, 지면제약상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옥동석(『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50-51)도 재정운용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고와 같은 맥락이라 판단된다.

것이였다. 이런 측면을 유념하면서 이하에서는 먼저 당시 공적자금의 조달과 운영과정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때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된 채권은 정부보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는 재정부담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지원과 회수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로서는 자기 책임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흔히 일컫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⁹ 바로 이와 같은 공적자금관리구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원의 수혜자였던 부실기업으로 하여금 지원의존적인 구제메커니즘에 의지하게 함으로써 고도성장기 우리 기업에 체화되어 있던 지대추구적 기업활동의 특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자금은 언뜻 보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입되고 회수된 것은 재투입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재정자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적자금의 구성과 활용과정에 직접적으로 재정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공적자금의 운용을 보장하고 있었다.¹⁰ 이렇게 공적자금 운영에 있어서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 제공자로서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이

들 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부담이 돌아가야 할 몫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상 세금부담의 증가로 일반 국민이 지게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자들은 경제위기적 국면에서 해외투자자나 국내의 부유한 자산가 내지 대형 금융기관들이었으며, 해당 채권이 정부보증채였는데다가 당시 IMF가 요구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고이자율을 보장받는 채권이었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적자금의 조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과정 이면에서는 원인 제공자 내지 고액 자산가층과 일반 납세자들 간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재정적 계기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국민의 정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 경제 주체들에게 차등적 지원구조로 작용하여, 지난 고도성장기에 우리 사회에 체화되어 있던 지대추구적 비생산적인 축적행태를 온존·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

전술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 동안 기업

9. 이와 같은 공적자금 관리체계상의 문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당시 재경부 보도자료 등을 분석한 황성현(“공적자금 문제의 평가와 상환대책”, 『공공경제』, 7(2), 2002, 284-288)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음.

10.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보증채로 발행하여 마련한 공적자금 이외에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한 부분”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외에 정부가 “시급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예산을 비롯하여 공공자금으로 투입한 금액 20.9조원, 그리고 공적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빌려준 금액 18조원(나중에 상환대책 마련할 때 이 이자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해주었음)’,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정부보증채 중에서 회수되지 못한 부분으로서 국채를 발행하여 상환하기로 한 49조원 등이 그것이다(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백서」, 2002; 재경부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2002 등을 참고)

11. 동 “상환대책(안)”을 보면, 당시 정부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지 산업활동을 공적으로 규제 내지 촉진해왔던 법률을 IMF 경제위기 대처국면에서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수정·보완해 전 부개정 내지 새로운 제정의 형태로 그 틀을 바꾸어 운용해나갔다. 그중 기업 내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발전법」을 들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 두 법의 운용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지원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구체적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1998년 12월 28일 기존의 「조세감면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1999.1.1. 시행)하면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지원책을 펼쳐나갔다. 새롭게 마련된 동 법은 큰 틀에서는 기존에 ‘기술인력개발’, ‘투자촉진’ 등 주요부문에 대한 지원조항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더하여 당시 현안이 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꾸면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법 제46조).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법 제55조). 이러한 규정들은 한편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아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세제상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구

조조정의 계기를 불러왔던 기업에 오히려 특혜의존적 축적행태를 그대로 온존시켜주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산업정책 지원의 목적을 담아 그때까지 적용해오던 「공업발전법」을 1999년 2월 8일자로 폐지하고, 동일자로 「산업발전법」을 제정·시행(5월 9일)하면서 산업발전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아내고 있었다. 동 법의 ‘제정이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더불어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산업발전법」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종전의 「공업발전법」이 ‘공업(제조업)’에만 적용대상을 한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조업과 ... 제조업외의 업종” 전반으로 적용대상을 넓히고 있으며, 더 중요하기로는 과거의 법은 정부가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 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새 법에서는 ‘기술’이라든가 ‘생산성’ 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정책 대상 업종과 세부사항을 ‘기능별’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포괄적으로 기능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각 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산업발전법」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법 제10조), 이와 관련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유휴설비 처리라든가 기술이전·고용승계 등 유휴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법 제13조), 산업구조재편과정에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실제로 1998년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었던 대기업 간 사업교환, 소위 빅딜은 「산업발전법」이 제정되기 전 초기에는 금융압박수단이라든가 글로벌 기준 등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1999년 2월 8일 자로 동 법이 제정·운용 되면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금융압박이라든가 글로벌 기준 등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 법 제10조의 「사업전문화유도시책」 수립 조항이 있어 공식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 내지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의한 개입과 특혜지원구조가 작동됨으로써 결국 지난날 정부 정책에 의한 기업 간 차등적 지원정책 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¹²

(3) 부동산정책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

다음으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생활현장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내재해있는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무릇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공적인 정책들 또한 공권력에 바탕을 둔 조세를 비롯한 재정활동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 행해지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당시 행해졌던 재정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내는데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정부 시기 부동산정책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1990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토지공개념 3법」의 폐기에 이른 과정, 그리고 국민의 정부 토지 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특혜수혜적 정책구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3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당시 치솟고 있던 부동산가격 안정과 더 근본적으로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당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입되었던 제도였다. 그 중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하였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분적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던 것을 1998년 12월 28일 국민의 정부가 스스로 폐기하였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지 않은 유일한 법이었지만 몇 차례 법률을 개정하여 유보와 인하를 거듭하다가 200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2년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차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는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렵게 만들어졌던 이들 법 중에 더 시행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폐지함으로써 토지공개념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토지의 보유와 활용에 관한 새로운 신호를 주어 후술하는 지가상승과

12.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소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만들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동법 제3장), 해당 기업의 활동에는 정부로부터 다각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여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운영해낼 수 있는 주체는 금융자본이나 대기업 계열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던 부실 중소기업들의 매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차별적 특혜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성을 키우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국민의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먼저 ‘국정과제’의 경우 대과제 19에서 “토지는 공급을 늘리고 이용도 편리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었으며(기획예산위원회, 1998, 42-43), 아울러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토지공급도 시장원리에 따라”(대한민국정부, 1998, 289-292)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준농림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같은 책, 293). 이러한 구상은 실제로 상당부분 실천에 옮겨졌던바, 먼저 1998년 4월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신규주택 전매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한국은행, 『한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2000의 해당연도 자료 참고). 한편 1999년 1월에는 일정 크기 이상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20년 이상 시행되어온 정부의 분양가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였다(윤정주·박성용, “분양가상한제 시장평가와 향후 과제”, 『건설정책저널』, 제36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 40). 아울러 1999년 7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7개 중소도시권의 전면 해제와 7개 대도시권의 부분 조정을 진행하였다(권용우, 『그린벨트』, 박영사, 2024, 93). 이처럼 국민의 정부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과정에 시장원리를 기본기조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8년 12월 28일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을 돕

기 위해 합병이나 사업양도·양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주게 하는 등(제42조) 구조조정과정에서 토지 구매 및 활용과 관련된 특례 조항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논리를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명분하에 특정한 조건하에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정책적 신호까지 제공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은 우리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생산과 삶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대하게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고도성장기 이래로 우리 사회에 체화되어 왔던 지대추구적 비생산적 토지보유 및 활용 행태를 온존·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귀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될 경제 틀의 기초를 구축해내려는 의지를 담아 4대부문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는 IMF가 요구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스스로도 정책기조를 시장원리의 확충에 두고 실제로 구조조정 과정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 틀의 구축 차원에서든 친시장적이고 탈규제적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나갔다.¹³

이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1998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5.7%라는 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하였던 것이 1999년 접어들면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1999년에는 당면한 위기국면을 극

복하여 10.7%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이전 해의 크게 낮아진 성과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였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듬해 2000년에도 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어지는 2001년에는 4.0%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7.2%의 높은 성장성과를 보이고 있었다(<표 1>).

그러나 이러한 총량적 성과지표의 개선만으로는 당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생활의 실태를 온전히 가늠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나 경제 제부문이 모두 동질적이지 않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계층이나 기업,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위와 같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이 펼쳐졌던 경제현상은 지난날 고도성장기 오랜기간 실행되어 온 불균형성장정책으로 인해 그 과정에 자리잡은 특혜지향적인 축적방식으로 인해 사회 제 계층, 기업, 산업 등 사회 제 부문간에 불균등발전구조가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지난 고도성장기 재정정책의 역사적 성격을 분석·계재한 『나라재정』 2024년 2월호, 6월호, 7월호 등의 우명동(2024)을 참고).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 국민의 정부 시기 구상하고 수행해나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제반 정책이 현실에서는 과거 명시적인 불균등정책 추진 시기에 자리 잡아 온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양식을 지양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온존·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를 주는데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었다.¹⁴ 이러한 사실은 결국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계층,

기업과 산업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경제실태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더 많은 이윤과 편익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상 자연스러운 현상인바, 현실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취해진 주요 정책과 그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수행의 결과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 기업 및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 제 부문 간 불균등발전구조의 측면과 그중에서 특히 재벌개혁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기업 부실화의 측면, 그리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활동과 주민들의 생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토지가격의 상승 추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 제 부문간의 불균등발전구조의 심화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지표로 제시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산업별 성장률의 불균등하고 불안정한 발전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1998년 경제성장률이 -5.7%의 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때 농림어업 부문 성장률은 -7.7%, 비농림어업부문 -5.6%, 그중에서도 특히 제조업부문 성장률은 -7.3%였었는데, 1999년 다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10.7%로 올라갈 때, 농림어업부문은 5.1%로 회복되고 있었는데, 비농림어업부문은 11.0%, 그

13. Wang and Zang(1998)은 '머리말'에서 당시 국민의 정부는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더 많은 구조개혁을 시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국민의 정부의 정책관을 읽어내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4. 박종찬("성장과 혁신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2006. 66)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불균형성장모델의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본고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참고바람.

중에서 특히 제조업부문은 23.0%로 큰 폭의 차이로 성장세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0, 11). 그 이후 다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로도 이러한 현상은 다소 기복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유사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서는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적 지원과 정책에서의 차등적 지원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실을 먼저 실질산출량(지수)을 노동투입량(지수)으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 노동생산성’의 변화추이를 통해 보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그것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1997년 33.0, 1998년 33.1이던 것이 차츰 더 떨어지고 있었으며 2002년에는 20.1로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해당 기업의 평균유형 고정자산을 종업원 수로 나눈 ‘실질노동장비율’을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동장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34.3, 1998년 29.5이던 것이 해마다 줄어들어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년에는 23.7%를 차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더 커져 갔던 것을 볼 수 있다(정연승·성백남·이원영,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 04-94, 중소기업연구원, 2004, <부표 6>, <부표 8>, <부표 9>에서 추출계산). 이러한 사실은 전자의 경우 노동자의 숙련도라든가 자본축적 정도, 생산과정의 결합방식, 생산수단의 규모나 작업능력 등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면에서 대기업이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해갔다는 것을 말해주며, 후자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설비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능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져 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분석해온 바와 같이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도 대기업은 과거처럼 더 안정적인 경영여건에 의지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상대적으로 더 키워온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벌개혁과 새로운 부실기업 문제의 등장

앞에서 기업구조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사업 전문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 사업교환, 소위 빅딜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더해주는 구조를 택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외형상 기업들끼리의 자발적 사업교환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도 결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건전한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도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업발전법」을 폐지하고 「산업발전법」을 제정까지 하여 사업 전문화를 선도해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해당 대기업들로 하여금 그 과정에 주어진 특혜에 의지해 오히려 과잉투자를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다시금 부실로 이어지는 경향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재벌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다가 1998년 12월 7일 그간의 5대 재벌 간의 합의 내용을 담아서 청와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99년 중으로 ‘5대 그룹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추진되었다.¹⁵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정책에 의지하여 투자를 늘리고 있었던 대우 그룹이 1999년 몰락하였으며, 현대그룹 역시 무리한 대북투자와 중복투자 등의 여파로 계열사들이 대거 워크아웃되는 등 새로운 부실기업 문제로 귀결되었다.¹⁶ 이러한 현상은 지난날 고도성장기 불균형성장

정책 운영과정에서 차등적 지원의 특혜를 바탕으로 과잉투자를 함으로써 결국 기업부실로 이어졌던 것과 같은 맥락의 현상으로서, 차등적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가 결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특혜에 의지하고자 하는 축적행태를 부추기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으로의 회귀와 지가의 반등

당시 지가 추세를 보면, 지가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 이래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것이 1990년 전 국평균 지가상승률 20.6%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1993년 -7.4%까지 떨어진 이후 1994년 이래 줄곧 안정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안정세는 1997년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지다가 1998년 경제위기 국면에서 -13.6%로 대폭 하락하였다가 이듬해부터 다소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약간의 양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9.0%라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그러는 가운데서도 변동 폭이 커서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장상환,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발전과 부동산투기,” 『역사비평』, 2004, 59의 <표 1>). 한편 이와 같은 변동 추이는 주택매매가라든가 아파트매매가 증가율에도 그 절대치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내림

의 추이는 지가의 변동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같은 논문, 67의 <표 2>). 이러한 현상은 1990년에 출범하였던 토지공개념의 실시가 1990년대 말에 와서 폐기되거나 약화되는 시기, 그리고 국민 정부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이 수행되었던 시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당시 토지보유와 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행이 당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에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갖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가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변동폭이 커지면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토지의 보유 및 활용과정에 전술한 바와 같은 특혜추구적 계기가 작동되어 토지를 통한 투기적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다시 부활시켰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 평가와 시사점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위기적 국면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한편으로는 IMF의 요구조건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에 경제침체를 극복해내기 위해 긴축, 확장을 번갈아 가면서 재정정책을 운영해나갔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수행 전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의 기본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기조 아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이 광범하게 펼쳐지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

15. 빅딜이 처음 시도된 이후 1999년 11월까지 계획되고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민(『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비봉출판사, 2000, 115-118 <표 11> 및 157-172의 <부표 1> ‘재벌정책 일지’을, 그리고 최종적인 빅딜추진 결과는 심지홍(『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경상논총』, 27, 한독경상학회, 2003, 195-196)을 참고.
16. 대우그룹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8년에도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중공업 이집트공장을 준공하는 등 사업확장을 멈추지 않았으며,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 빅딜협상도 실패하면서 결국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대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이 2002년 2월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은 대북사업의 부담으로 부실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대북사업 축소와 부실 계열사 지원 중단, 강력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현대 계열사의 워크아웃 지정을 요구했다(중앙일보, 2002.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754802>)라는 기사 참고.

러나 그러한 정책 기조와 그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해나감에 있어서 지난날 고도성장기 이래 우리 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층 간 왜곡된 사회경제실태를 불러온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행태(양식)를 지양해내는 정책적 노력 없이 단순히 외형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시장 우선의 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실제 경제현장에서는 오히려 과거 고도성장기에 명시적으로 취해졌던 차등적·선별적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차등적인 지원구조가 작동되게 됨으로써, 오랜 기간 우리 기업의 축적행태와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행태에 체화되어 있던 지대추구적인 사회경제 틀을 지양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온존·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내고자 공공·금융·기업·노동 부문 등 4대부문에 개혁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나가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경제발전과정에서 기존의 비생산적 기득세력과 그에 맞서는 대응세력 간의 지난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시켜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이로써 결국 비생산적 경제운영 틀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은 다시금 다음 시기로 넘겨지게 되었다.



<표 1> 중앙정부 통합재정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 및 순융자	수입	수지차	GDP	실질 경제성장률	통합재정수지
1995	698,042(16.1)[17.0]	719,201(17.7)[17.6]	21,159	4,096,540	8.9	0.5
1996	824,242(18.1)[17.9]	841,867(17.1)[18.3]	17,625	4,609,530	7.2	0.4
1997	977,269(18.6)[19.3]	919,794(9.3)[18.2]	-57,475	5,063,140	5.8	-1.1
1998	1,124,350(15.1)[22.4]	954,821(3.8)[19.1]	-169,529	5,010,270	-5.7	-3.4
1999	1,181,769(5.1)[21.5]	1,058,546(10.9)[19.3]	-123,223	5,490,050	10.7	-2.2
2000	1,267,858(7.3)[21.0]	1,340,480(26.6)[22.2]	72,622	6,032,360	8.8	1.2
2001	1,322,452(4.3)[20.3]	1,422,137(6.1)[21.8]	99,685	6,514,150	4.0	1.5
2002	1,310,566(-0.9)[18.2]	1,568,778(10.3)[21.8]	258,212	7,205,390	7.2	3.6
2003	1,570,280(19.8)[20.5]	1,696,105(8.1)[22.1]	125,825	7,671,140	2.8	1.6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재정경제원, 『한국통합재정수지』 1995, 2002 및 2005년판;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0년판.

<표 2>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기능별 분류

(단위: 억 원, %)

구분	세출 및 순융자 기능별 분류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지역개발	오락문화종교	경제사업	주분류외지출	합계
1995	30,020 (4.2)	111,246 (15.7)	39,305	127,653 (18.0)	5,121 (0.7)	63,617 (9.0)	56,905 (8.0)	4,230	176,762 (24.9)	95,462	710,321
1996	33,749 (4.0)	125,530 (15.0)	44,720	144,353 (17.2)	6,820 (0.8)	78,842 (9.4)	70,774 (8.4)	5,338	219,649 (26.2)	108,635	838,410
1997	42,492 (4.3)	131,595 (13.3)	47,893	162,488 (16.4)	7,771 (0.8)	96,314 (9.7)	66,767 (6.7)	6,790	243,335 (24.5)	186,053	991,499
1998	49,936 (4.4)	136,206 (12.1)	53,811	167,301 (14.9)	9,573 (0.9)	122,522 (10.9)	70,475 (6.3)	7,877	302,450 (26.9)	204,199	1,124,350
1999	43,796 (3.7)	131,991 (11.2)	58,607	176,892 (15.0)	10,524 (0.9)	147,035 (12.4)	95,971 (8.1)	8,940	325,073 (27.5)	182,940	1,181,769
2000	66,526 (5.2)	143,968 (11.4)	57,937	193,728 (15.3)	9,395 (0.7)	193,428 (15.3)	67,733 (5.3)	10,481	319,537 (25.2)	205,126	1,267,895
2001	221,260 (14.0)	157,210 (9.9)	63,309	229,241 (14.5)	8,361 (0.5)	184,143 (11.6)	121,993 (7.7)	13,294	417,933 (26.4)	164,553	1,581,297
2002	82,342 (6.3)	152,599 (11.6)	70,609	215,726 (16.5)	4,981 (0.4)	212,314 (16.2)	24,827 (1.9)	18,506	296,237 (22.6)	232,424	1,310,565
2003	104,671 (6.7)	178,396 (11.4)	82,701	235,887 (15.0)	6,642 (0.4)	212,434 (13.5)	79,102 (5.0)	18,495	451,158 (28.7)	200,793	1,570,279

주 1 ()안의 수치는 총세출 및 순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기능별 분류' 내역은 기재부, 『한국통합재정수지』상의 수치를 옮긴 것이나, 1997년의 합계금액은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합계액 977,269억원과 차이가 있음을 참고바람.

자료 위와 같음.

<표 3>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와 총세입의 경제적 분류

(단위: 억 원, %)

	세출 및 순융자				총세입의 경제적 분류			
					경상수입		자본수입	총세입
					조세수입	세외수입		
1995	490,607(70.3)	120,117(17.2)	87,318	698,042	622,098(86.5)[15.2]	84,853(11.8)[2.1]	12,250	719,201
1996	554,291(67.2)	158,872(19.3)	111,079	824,242	723,856(86.0)[15.7]	104,996(12.5)[2.3]	13,015	841,867
1997	618,960(63.3)	171,078(17.5)	187,231	977,269	784,338(85.3)[15.5]	123,062(13.4)[2.4]	12,394	919,794
1998	695,253(61.8)	184,692(16.4)	244,405	1,124,350	783,100(82.0)[15.6]	163,238(17.1)[3.3]	8,483	954,821
1999	749,887(63.5)	234,364(19.8)	197,518	1,181,769	876,660(82.8)[16.0]	168,822(15.9)[3.1]	13,064	1,058,546
2000	867,085(68.4)	202,364(16.0)	198,409	1,267,858	1,077,326(80.4)[17.9]	249,768(18.6)[4.1]	13,387	1,340,481
2001	999,613(75.6)	222,070(16.8)	100,769	1,322,452	1,133,312(79.7)[17.4]	276,087(19.4)[4.2]	12,738	1,422,137
2002	1,044,050(79.7)	262,156(20.0)	4,361	1,310,566	1,236,903(78.8)[17.2]	317,542(20.2)[4.4]	14,333	1,568,778
2003	1,329,226(84.6)	266,141(16.9)	-25,090	1,570,277	1,353,672(79.8)[17.6]	328,491(19.4)[4.3]	13,942	1,696,105

주 1 자본지출의 ()안의 수치는 총세출 및 순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조세수입의 ()안의 수치는 총세입 대비 비중이며,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위와 같음.

국가예산 결산감사와 K-방산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K-방산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회계정보와 체계적인 결산감사는 재정 건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 결산감사 사례를 통해 현행 감사제도를 살펴보고, 위험 중심 감사와 내부통제 강화 등 국가회계 감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유경연 대령, 해군대학 교수부장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2026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728조 원으로 편성되어 나라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그 중 국방 분야 예산은 65.9조 원으로 정부의 확고한 국방력 투자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공공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2007년 국가회계법 제정으로 2009년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국방부도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글로벌 진출의 국방 분야도 재정업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미래지향적 재정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더욱 절실하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수준의 정부경제력을 갖추려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주장하였다(윤성식 2004, 송윤근 2007). 본격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 및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가 작성된 이후는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로 김봉환과 허예슬(2016)은 정부 부채를 관리하는

도구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로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성과평가를 비롯한 정책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도진 등 2015).

그러나 아직 정보이용자가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통하여 산출된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이 높지 않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과 산업 성장동력 기능을 하므로 회계감사가 재무제표에 잠재된 오류가 정정되는 재무감사의 중요한 기회이면서 사업 타당성, 예산 편성, 성과평가 등 성과감사, 이행감사 기능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국가회계 감사

공공부문의 감사제도를 ‘공공감사기준’을 중심으로 일관된 체계로 정비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가 있었다(방동희 2011).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 감사기구의 권고에 따라 제정된 ‘공공감사기준’과 2010년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감사기준’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공공부문 발생주의 결산감사를 살펴볼 때 제고되어야 할 유의미한 내용과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감사와 관련한 원칙을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이행감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공감사기준’은 재무감사, 성과감사 그리고 이행감사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감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의 절차와 범위는 감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감사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이행감사를 구분하여 감사원칙을 제시할 때 보다 목적 적합한 감사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SSAI(International Standards for Supreme Audit Institutions)는 세계감사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ISA(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를 최대한 활용하여 회계감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감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공감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ISSAI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공공감사기준’에서는 공인 회계사가 사용하는 회계감사기준의 활용을 선택사항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의 회계감사는 민간부문 감사기준을 활용하여도 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공감사기준’도 민간부문의 회계감사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ISSAI는 고유위험과 내부통제위험을 포함한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와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 중심 감사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공공감사기준’은 거래중심 감사접근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부문의 감사

가 현대감사의 패러다임에 따라, 재무감사의 접근방법도 위험 중심 감사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공공감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ISSAI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의 착수, 수행 및 보고와 관련하여 피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사절차 및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감사기준’은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을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감사인이 감사인의 발견사항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K부의 결산감사보고서 감사사례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과정을 분석한 사례를 통하여 현행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결산보고서 감사과정을 따라가 본 중앙관서는 K부이다. K부가 작성한 20*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과정, 자체감사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3 회계연도부터 20*6 회계연도까지를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계열적 추세도 살펴보았다.

감사원은 감사 시작 전 감사 중점 및 감사실시계획에 대하여 K부와 사전토의 후 K부에 대한 20*6 회계연도 결산서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감사현장에 투입된 감사 인원은 3명이었다. 감사원은 회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감사반장으로 하여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원의 결산보고서 감사는 문서검증으로 계정 잔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재무결산서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표 1> 감사원의 K부 재무결산서 검사결과

감사원의 재무제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자산이 1,864억 1,285만 원 과소계상되고 부채가 181억 8,918만 원 과대계상되어 순 자산이 2,046억 203만 원 과소계상 되어 있었고 재정운영결과가 427억 7,221만 원 과소계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2,473억 7,424만 원 과소계상 되어 있었다. 오류 발생 원인은 아래와 같다.

- ① 무상양여 받은 전비품 계상 누락
- ② 선급비용 계상 누락
- ③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④ 프로그램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 ⑤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상 오류
- ⑥ 전기징수결의 착오정정 과대 계상
- ⑦ 잡손실과 잡이익 임의 계상 오류
- ⑧ 기금전입금 인식 오류 및 내부거래 미제거

<표 1>에서 오류 발생 원인별 항목의 대부분이 K-방산과 관련된 예산 관련 항목이며, 적정수준의 예산반영 여부, 제도의 실효성 등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다. K부는 자체감사활동의 일환으로 2013년에 발생주의 회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무감사를 수행하고, 이후 자체적으로 별도의 발생주의 재무감사 중심의 자체감사활동은 사실상 행해지고 있지 않다. 현행 K부의 자체감사활동은 예산집행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활동은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활동은 내부통제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중앙관서도 마찬가지이다. 감사계획의 협의단계에 관찰된 감사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감사 시작 전 20**년 1월과 2월에 걸쳐 감사중점 및 감사실시계획에 대하여 K부

와 사전토의를 하였다. K부의 사례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피감기관과의 협의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인 1월과 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지적위주의 입증감사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위험에 근거한 내부통제구조 중심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는 회계연도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계획단계에서 감사위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평가단계는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내부통제구조가 재무제표상에 존재하는 회계처리오류를 바로잡지 못할 위험을 평가하여 기말입증감사의 범위와 시기 및 감사방법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구조 위험에 대한 감사과정은 피감사인이 내부통제구조의 문제점을 깨닫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중간감사과정을 생략하였다. 이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오류지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말입증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감사원은 공인회계사를 팀장으로 하여 3명의 감사인원을 20**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에 걸쳐 현장에 투입하였다. 이는 많은 시간을 기말입증감사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통제위험의 평가가 생략됨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감사팀장을 공인회계사로 한 것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기말입증감사에서 사용한 감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감사원이 사용한 감사기법은 결산검사 형태의 문서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결산감사의 과정에서 전산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데이터의 입수 및 분석에 있어

전산감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감사원이 다양한 감사기법을 활용하고 감사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사수행이후의 다음과 같은 후속 보고절차가 있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년 3월 30일에 K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다. 이후 K부는 20**년 4월에 감사원이 제시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반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년 4월 27일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20*6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그 결과를 포함하였다. 하지만 재무감사결과로 발견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별도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보고과정에서 오류의 발생원인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현행 재무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인에 도움을 주는 역할보다는 감시자의 역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K부의 자체감사활동은 조직의 특성과 전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체감사활동이 감사원의 감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활동으로 신뢰성 있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있지만, 발생주의 재무제표 작성의 도입단계에서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재무감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 즉, 자체감사활동을 통하여 내부통제구조

의 정비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감사 관행은 K부의 재무제표 작성에 기여한 정도와 그 한계를 살피기 위해 감사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의 크기를 재무제표의 정확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

는 다음 회계연도 전기 오류손익과 비교하고 매 회계연도에 지적된 회계 처리의 오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수준이다.
 이제부터 감사원의 노력이 K부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표 2> 감사원의 수정요구사항

(단위: 억 원)

항목	20*3년	20*4년	20*5년	20*6년	평균
자산, 부채, 손익 인식 오류 등 지적사항 총액	43,809	14,791	12,443	8,770	19,953
자산총액	1,647,462	1,711,475	1,773,110	1,975,210	1,776,814
부채총액	1,211,891	1,309,037	1,420,462	1,671,322	1,403,178
재정운용순원가	304,670	325,535	352,398	394,263	344,217
자산등재오류/총자산	1.22%	0.50%	0.62%	0.25%	0.63%
부채인식오류/총자산	1.94%	0.65%	0.00%	0.02%	0.58%
손익인식오류/재정운용결과	0.07%	0.85%	0.42%	0.87%	0.57%

<표 3> 회계연도별 K부에 대한 지적사항 유형

오류유형	20*3년	20*4년	20*5년	20*6년
무상양여 받은 전비품 계상 누락	○	○	○	○
무상양여 받은 전비품 과대 계상		○	○	
미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등 기간귀속관련 오류	○		○	○
대손충당금 계상 오류	○		○	○
표준단가회계 적용 오류	○	○	○	
자본적지출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누락		○	○	
시설 등에 대한 취득원가 오류		○	○	
소송사건과 관련한 충당부채 또는 확정부채 미설정	○	○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상 오류				○
기금전입금 인식 오류 및 내부거래 미제거				○
전기징수결의 착오정정 과대 계상				○
프로그램원가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
잡이익과 잡손실 임의상계				○

신뢰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 살펴보고, 감사원의 오류 지적에 의해 정정된 정도로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발생주의 결산보고서상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한 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2>에서 감사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수정요구 사항은 20*3년 4조3천억 원에서 20*6년 8천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이 K-방산 관련 업무인 특징이 있다. 그러나 감사인이 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오류를 정정함으로 기여하는 바는 감소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정확성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하기 힘들다.

<표 3>에서 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상 양여 받은 전비품 계상누락, 자산누락, 자산 과대 계상하는 등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관되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표준단가적용오류와 미수채권에 대

한 대손충당금의 과대 또는 과소설정 오류도 20*6 회계연도를 제외한 모든 회계연도에 보이고 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K부의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K부의 회계감사가 내부통제위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원인의 일부이며, 대부분이 어렵고 복잡한 K-방산 업무와 관련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피감기관의 내부통제구조 정비를 지도·감독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K부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K부는 정기적인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현행 K부의 자체 감사활동은 예산집행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활동은 부수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다른 중앙부처도 유사하지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도 내부통제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공공부문 감사제도 제안

공공부문 재무결산 감사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회계처리오류가 반복되고 신뢰할만한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의 목표를 달성하고 유용한 회계정보 가치를 담은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특히 K-방산의 글로벌 진출은 세계적 수준의 감사제도, 회계정보의 유용성 향상, 글로벌 방산업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핵심동력이 된다.

‘공공감사기준’의 감사절차와 범위 재검토

우리나라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도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이행감사로 구분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감사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감사 범위와 감사절차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정부부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감사기준’이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원칙과 방법을 성과감사 및 이행감사와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K-방산 글로벌 진출에 맞춰 사업타당성, 해외업무 제도, 예산편성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감사, 이행감사로 실무와 규정을 고려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 회계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공감사기



준'은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민간부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감사절차와 범위를 활용하여 '공공감사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대안이다.

감사위험과 '내부통제평가 검토의견' 제도 마련

현행 감사원의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발견된 지적사항을 위주로 국회에 보고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지적사항의 발견에 효과적인 기말입증감사에 집중하여 감사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즉, 현행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감사계획의 단계에서 총괄적인 감사위험을 평가하고 내부통제평가에 근거한 통제위험을 평가한 후 기말입증감사의 감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거래중심의 감사접근에서 위험중심의 감사접근으로 현대회계감사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민간에서 내부통제의 수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의무화를 정부부처 일정 자산 규모 소관별 재무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민간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하여 피감기관의 업무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감사인과 피감기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현행 감사원의 감사는 피감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은 20**년 3월 30일에 K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견사항에 대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지만, 감사원은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다.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시적 소통 이외에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감사가 중앙관서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인하기 위해서는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쌍

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위주의 의사전달 방식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감사인이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할지 도움을 주는데 적합할 것이다.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구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발견사항을 활용하여 업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ISSAI 260 Practice Note에서도 감사인에게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감사기관, 피감기관 및 기술집약적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연관 보험기관의 다변화, ESG 경영 추진, AI 활용 등에 대한 예산반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험중심 감사접근'의 자체감사활동 추진

K부의 자체감사활동 사례를 통하여 감사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각 중앙부처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한다. K부는 20*4년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정착을 위해 회계감독관회의를 소집하여 대대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정착되는데 상당한 기여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원가보상, 실효성 있는 예산반영과 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해외사업 특히, 방위산업을 견고하게 이어가도록 재무감사의 접근 방법도 내부통제구조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산출하도록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칼럼은 「정부부문 발생주의 결산감사 어디로 가야 하나?」

(유경연 등, 2018년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논문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자료입니다.

대동법 시행 이후 중앙재정의 부족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물, 진상의 추가징수 관행이 사라지자, 중앙정부는 매해 한정된 대동 세입으로 왕실부양과 각사경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대동사목 내에 각종 역가(役價: 노동 비용)를 대동미로 지급하는 예산지침이 마련되면서 대동법은 당초의 입법 취지와 상관없이 조선후기 중앙재정을 경직화하는 계기를 낳았다.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대동법의 딜레마 - 고정된 수입이 불러온 효과

대동법은 백성의 공물 부담을 줄여주고, 서울시장을 활성화한 점에서 ‘조선 최고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동법이 중앙재정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만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동법이 18세기 이후 조선왕조의 재정 구조에 미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만 이는 대동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대동법 시행 이후 재정수지와 시장의 변화상을 컨트롤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문제로 볼 수 있다.

애초에 대동법은 ‘현물조달’을 ‘시장조달’로 전환한 제도였다. 건국 초부터 무본억말(務本抑末)의 기조



01 수문상친림관역도

(水門上親臨觀役圖,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영조 재위 36년(1760) 청계천 준천을 완성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그림이다. 영조는 준천역에 참여한 5만 명의 장정에게 모두 급료를 지급하였다. 이는 대동법 시행 이후 역군들에게 역가(役價)를 지급하는 지출 관행이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01



02 연분재실요람(年分災實要覽)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76년부터 1891년까지 8도와 수원·광주·유수부의 재실분등 내역을 기록한 책이다. 비축제의 시행 이후 각도 관찰사가 매년 도내 각읍의 재해 상황을 초실(稍實: 풍년), 지차(之次: 중간), 우심(尤甚: 흉년)의 용어로 등급을 나누어 조정에 보고하면, 조정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급재(給災: 재해입은 연세지로 인정해 줌)를 내려주었다.

03 경상도창원부소재용동궁전답경자

양안(慶尙道昌原府所在龍洞宮田畵庚

子畵案,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경자양전 무렵(1722) 작성된

경상도창원부 소재 용동궁 전답

양안이다. 경자양전은 조선후기에

시행된 최대 양전사업으로, 원장부에

실린 토지결수는 140만 결에 조금

못미쳤다.



02

하에 시장을 억제하고 현물공납제의 기초를 유지해 온 중앙정부가 시장을 매개로 한 재정물류의 재편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호에서 대동법 시행 이후 호조, 선혜청 소속 창고들이 도성 안팎에 신설되면서 서울에 거대 물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시장조달 시스템과 짝을 이루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호조, 선혜청의 부속 창고에서 서울시장의 상인들[시전상인, 각사주인, 공계인 등]에게 물품값[貢價]이나 인력 비용[役價]을 지불하면, 이들이 왕실과 각사에 정기적으로 물품 및 노동력을 제공하는 구조였기에, 도성 안팎에 재정창고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장 또한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원을 시장에 공급하듯이, 조선후기에도 대동법 시행을 통해 정부 재

원을 서울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도성민들의 생계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외방농민과 도성민들에게 혜택을 준 대동법이 조선후기 재정구조에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동법은 애초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의 재정 부족을 야기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조선시대 중앙의 재정수입은 호조의 전세와 선혜청의 대동세, 그리고 병조를 비롯한 중앙 군문의 군포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왕실부양과 각사행정 경비, 관료의 녹봉과 하급원역 및 군인의 급료가 해당 관서에서 지급되었다. 이중 왕실 각 전궁과 행정 각사에 진배되는 물품과 인력 동원 비용은 선혜청과 호조에서 각각 원공물과 및 별무가

[illegible]

역시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선혜청의 수지는 중앙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문제는 대동법이 확대 시행된 18세기 이후로 선혜청의 수지구조가 갈수록 경색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재정의 수입-지출 구조를 진단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대동법을 통해 가능해진 점이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상품화폐·명목화폐에 기초한 선혜청의 수입-지출 총계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조선후기 재정적자 현상만 보고 조선왕조의 행정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으로 볼 수 없다.

현물공납제 하에서도 공안(貢案)-횡간(橫看) 작성을 통해 공물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기는 하였지만, 국

가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화폐로 환산하여 일관되게 관리하지는 못했다. 왕실 각 전궁과 행정 각사에서 필요 물자를 직접 각읍 민호에게 할당해 수취해 쓰는 구조였기 때문에 중앙에 상납되는 전체 공물의 수입량과 지출량, 재고량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공물, 진상이 부족할 경우, 벌공, 벌진상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관행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매년 중앙의 수입 및 지출을 정확히 통계 내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토지 1결당 쌀 12두 [포목, 동전가 포함]를 걷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선혜청에서는 1년에 거둘 대동 세입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전세 수입을 총괄하는 호조와 대동세 수입을 총괄하는 선혜청이 ‘중앙재정의 쌍두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만, 지방에 거두는 대동세는 고정되어 있었던 데 반해, 왕실 부양과 국가 행정에 쓰이는 경상비는 늘어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중앙의 재정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것이 대동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가 마주한 일차적인 딜레마였다.

대동세를 늘릴 수 없었던 이유

대동법 시행 이후 지방민들은 현물 대신 쌀 12두만을 공식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반면, 중앙 정부는 이 한정된 세입으로 잡다한 중앙경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대동세가 시중 공물가보다 4~5배 높은 액수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대동미를 지방경비로 할애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조달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에 없던 공물이 새로 생기고, 기존의 공물도 그 수량이 늘어나게 되어 선혜청에서 감당해야 하는 공물가가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호조로의 정기적 재정 지원, 왕실 가족 생활비 지원,

소규모 관서의 급료성 경비 지원 등 별도의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선혜청의 재정수지는 자주 적신호를 보였다.

물론 **이같은 현상에 대해** **혹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대동세의 세율이 고정되어 경비가 부족해졌다고 한다면, 더 많은 토지에 대동세를 부과하거나, 자체 세율을 높이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우선 답하자면, 인조대 갑술양전(1634)과 숙종대 경자양전(1720)을 계기로 수취 가능한 경작지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주층의 반발로 조선후기 내내 전국적인 양전사업과 이에 대한 조세 부과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새로 파악된 토지 결수 역시 조선 전기의 결수를 넘어서지 못했다.

18세기 이후로는 중앙에서 각도 관찰사가 보고한 연분재실장계(年分災實狀啓: 풍흉, 재해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를 검토해, 수세실결(收稅實結: 당해 풍흉을 고려해 수세할 수 있는 토지 규모)을 정하고 전세 및 대동세를 총액제로 수취하는, 이른바 비총제(比總制)가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대동세 수입의 증대에 걸림돌이 되었다. 실제로 비총제 시행 이후 중앙의 토지세는 경자양안에 실린 전체 토지[약 140만 결]의 절반을 조금 넘는 토지[70~80만 결]에 부과되었다. 비총제 하에서 매년 수세실결이 총 결수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동세는 19세기까지 수세실결에 근거해 일정 수준을 유지할 뿐이었으며, 크게 흉년이 든 해는 이마저도 확보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조선왕조의 재정이념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백성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일관되게 부세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공표해 온 조선왕조는 부세 감면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의 생활 기반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항상적인 재정수입을 꾀하였다. 이러한 민본주의적 세계개혁 속에서 한 번 정해진 세율은 조선 말기까지 상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실제로 조선후기 영정법과 대동법 시행을 통해 확정된 전세 및 대동세의 세율은 19세기까지 고정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상업세와 같은 별도 수입이 현저히 적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지면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요컨대, 조선후기 양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던 데다가, 비충제의 시행으로 궁방전과 아문둔전, 그 밖의 잡탈전이 면세지로 지정되고, 극심한 흉작지에 대해서도 매해 면세 혜택이 주어짐으로써[給災] 조선후기 내내 수세실결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대동세의 총액이 25~30만 석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매해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해 지출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재무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세입의 측면에서 대동법이 중앙재정에 끼친 영향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출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동법, 노동의 대가를 공식화하다

현존하는 대동사목을 살펴보면, 조목들 다수가 대동세를 어디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사행정과 왕실의례에 쓰일 물품 구입 비용과 수송, 포장 등의 노동 비용 외에 행정, 군사방어에 필요시 되는 물품 구입과 수리, 노동력 차출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놓았다. 중앙의 공물이 뿐 아니라, 지방의 행정 경비와 잡다한 요역 동원에 쓸 경비를 대동세로 지급하도록 일일이 조목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처럼 대동사목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혁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공물이 아닌, ‘역(役)’이었다.

전근대 왕조 국가들은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 국가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공역사업에 민간의 노동력을 동원해왔다. 조선왕조 역시 16~60세의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군역을 지우는 한편, 1년 중 6일의 기한을 정해 국역에 참여케 하는 이른바 요역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16세기 들어 ‘양반’이 지배 계층화되어 군역과 각종 요역에서 제외되는 한편, 가난한 백성들에게 역 동원이 집중되면서 요역제 역시 문란해졌다. 이에 요역을 직접 동원하기보다, 결포(結布: 토지에 별도로 부과하는 포목세)를 대신 거두고, 역군을 모집해 급료를 주고 부리는 관행이 나타났다.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이러한 잡역세가 상당 부분 대동세로 수렴되었다. 현재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본래 명칭이, ‘김육대동군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인 것은, 김육이 충청도에서 추진한 대동법이 백성의 공물, 요역 부담을 ‘고르게’ 줄여줌으로써 사실상 군역을 실현하고자 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조선왕조는, 서구 유럽과 역사적 방향성은 다르지만, 현물지대가 화폐지대로 전환됨과 동시에 노동지대 역시 화폐지대로 전환되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소위 급가(給價: 값을 지불함) 체제로의 전환이라 불리는 재정구조의 변화가 대동법을 계기로 공식화된 것이다. 이는 조선 전기 조용조 체제 하에서 수취의 영역에 속하였던 인간의 노동이 대동법을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지출의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7월호에서는 중앙재정의 지출이 어떠한 면에서 늘어나고 있었으며, 조선왕조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는지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불의함 권력에 맞선 공공 책임과 재정윤리의 출발점

지난 호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구국운동과 함께 정의·민중·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의 재정인식을 살펴보았다. 안중근은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 사상가였다. 그가 생각한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재정은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그의 글과 공판기록 속에 담긴 국가관과 재정윤리를 따라가며 오늘날 공공 책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이름
안중근(安重根)
생몰연도
1879년 9월 2일(고종 16년) ~
1910년 3월 26일(순종 4년)
국적
조선(대한제국)
활동
항일독립운동가, 의열가
주요 사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일본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 암살
본관
순흥(順興)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칼바람 거울을 버터 뿌리 내려주신 덕분에,
따스한 봄바람에 꽃을 피웁니다.”

- 시민 박O원 -

서언

안중근은 조선의 아들로 태어나 31년을 살다가 오직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비록 31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갔지만, 그가 남겨놓은 유산은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거룩한 유산이다. 그는 단순히 순간적 충동이나 생각에 따라 이등박문을 척살한 것이 아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확고부동한 애국심과 애족심 그리고 분명한 정치사상에 의거하여 하얼빈 의거를 단행했다. 그는 국가, 정치, 경제, 교육, 문명, 국제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그의 생각은 안중근자서전과 공판기록 등에 절절히 담겨있다.¹

안중근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의 생각의 깊이를 느끼게 된다. 어떻게 그 당시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그 시절에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평화사상과 민권사상 등을 체계화할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의 국가와 재정에 대한 생각들은 오늘날 숭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된다.

안중근에게 국가는 권력자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야 하는 공적 공동체였다. 따라서 책임 있는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이고, 재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책임지는 재정이어야 한다.

안중근의 국가에 대한 생각

안중근의 재정윤리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국가에 대한 생각을 알아 봐야 한다. 국가와 재정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재정은 국가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국내의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자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² 안중근은 사망하기 직전인 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일본이 해야 할 급선무를 충고했는데, 첫 번째 언급한 것이 현재의 재정의 정리였다. 둘째는 세계 각국의 신용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이 일본 자체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란 사람으로 치면 건강이다. 다시 말해서 재정을 길러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 급선무다.”고³ 언급했다. 안중근은 국가의 건강한 미래는 바로 재정에 달려있음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그의 국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자.

1 필자는 현재 수년간 2027년 출간을 목표로 『안중근연구전집(전5권)』을 집필하고 있다. 제1권은 구국투쟁 제2권은 정치사상 제3권은 국가론 제4권은 교육론 제5권은 공판투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위기국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서는 홍기용, “재정지출의 방향을 읽다: 돈은 어디로 흐르고,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재정』 2026년 4월호(한국재정정보원, 2026), pp.62-65 참조.

3 안중근, “청취서,” 국가보훈처(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서울: 국가보훈처, 1996), p.55.

그의 국가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독립국가론’으로 명칭할 수 있다. 안중근에게 독립은 단순히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존립의 근본 조건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독립권 회복을 자기 세대에서 이루지 못하면 아들 대, 손자 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안중근에 있어서 독립국가론은 그의 행동 전반을 규율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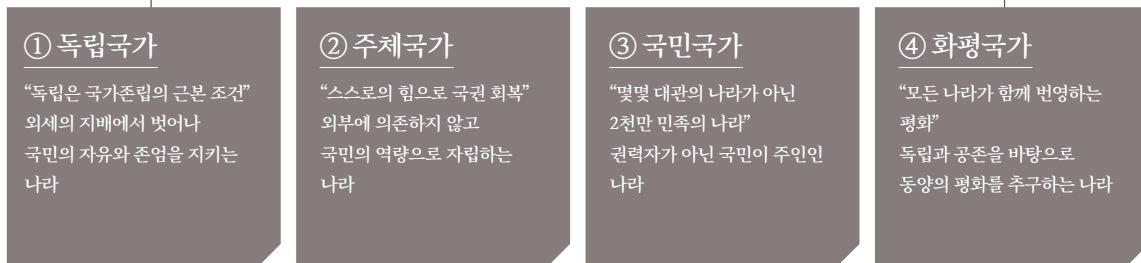
둘째, 그의 국가에 대한 생각은 ‘주체국가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안중근은 독립이 외부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국민이 국민 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민권과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자주성이 국민 내부의 주체적 역량에서 나온다는 인식이다. 그가 “스스로 강한 힘으로 제가 국권을 회복해야만 건전한 독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⁵ 한 것은 바로 주체국가론을 표현한 것이다.

셋째, 그의 국가론은 국민국가론이다. 안중근은 나라를 “몇몇 대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2천만 민족의 나라”라고⁶ 보았다. 이는 국가를 권력자나 관료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국민 전체의 공동체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국가론은 당시 왕조국가적 질서 속에서 매우 선구적인 국가관이었다.

넷째, 그의 국가론은 화평국가론이다. 안중근이 추구한 평화는 단순한 정전상태나 침묵의 질서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자주독립하여 함께 잘살 수 있는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동양평화론은 독립과 주체, 국민과 화평이 결합된 국가론의 실천적 표현이었다.

이처럼 안중근의 국가론은 국가의 독립, 국민의 주체성, 국민 중심의 국가운영, 조화로운 평화 질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관은 오늘날에도 책임 있는 국가의 조건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안중근이 꿈꾼 국가



4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자서전』(서울: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1982), p.131. 若我代 不成目的則 及于子代 孫子代 必復大韓國 獨立權然後..

5 위의 책, p.128. 以自強力 自復國權可謂健全獨立矣.

6 위의 책, p.101. 況國家 非幾個大官之國家 堂堂二千萬民族之國家.

안중근의 재정윤리

안중근 의사는 재정문제를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 속에는 분명한 재정윤리의 원형이 담겨 있다. 특히 그가 의병운동 과정에서 재정과 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가운영에서 재정과 안보가 핵심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재정을 사람에게 건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건강을 잃으면 그 사람은 활동이 중지되거나 죽음을 맞이한다. 마찬가지로 국가에게 있어서 재정은 국가존립의 근거이자 국가 활동의 원천이다. 이처럼 국가와 재정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해 그의 재정윤리의 원칙을 알아보자.

첫째, 안중근의 재정윤리는 대의에 기초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출발시키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민족, 동양평화라는 대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이번 거사는 나 일개인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동양평화를 위해 한 것이다.”고⁷ 당당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논할 것이 없다”고⁸ 했다. 따라서 안중근의 관점에서 재정은 특정 정파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대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그의 재정윤리는 국민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는 “만일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어디 있을 것인가”라고⁹ 설파했다. 이러한 말은 국가재정 역시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적 자산을 뜻한다. 조세는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공적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며, 재정지출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그의 재정윤리는 국가책임을 중시한다. 안중근은 “나는 오로지 국가를 위해 진력한 것이다”라고¹⁰ 하였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책임윤리의 표현이다. 국가재정도 마찬가지다. 재정은 권력의 장식물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재정을 운영하는 정치인과 관료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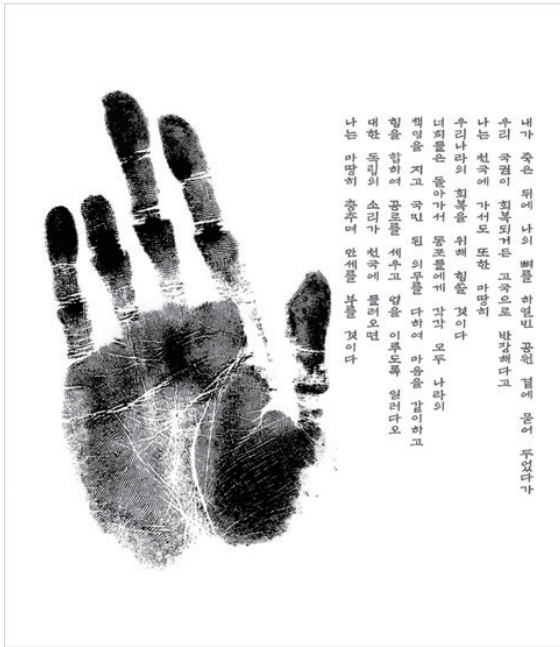
넷째, 그의 재정윤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재정은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7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5), p.384. ‘공판시말서 제3회’ 중.

8 안중근, 앞의 책, p.181. 我之死生勿論.

9 위의 책, p.101. 若人民無之則 國家 可以有之.

10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p.241. ‘피고인 안응칠 제8회 심문조서’ 중.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유언(출처: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중앙홀 좌상(출처: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 재정윤리의 4원칙

대의의 재정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재정

국민의 재정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책임의 재정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책임지는 재정

미래의 재정

현재와 미래세대의 균형을 고려하는 재정

결국 안중근의 재정윤리는 정의의 재정, 국민의 재정, 책임의 재정, 미래의 재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철학의 문제이다. 예산은 국가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책임지는가를 보여주는 정치적·윤리적 문서이다.

맺음말

안중근 의사가 꿈꾸었던 국가는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독립국가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민이 중심이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의와 평화가 살아 있는 책임 있는 국가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재정문제는 단순히 예산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재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재정운영에는 반드시 정의와 책임의 윤리가 따라야 한다. 안중근 의사의 국가론과 재정윤리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재정은 대의와 책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 안중근의 공공 책임 정신은 오늘날 책임 있는 국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안중근의사기념비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경쟁력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다”

이 책은

저금리 시대 이후 재편되는
경제 질서와 국가 재정의
과제를 조망하는
거시경제 분석서

『머니쇼크』

제이미 러시 외 저 | 교보문고(2026년)

지난 40여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저금리 환경이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 학자들은 금리 상승, 고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의 도래를 전망한다. 특히 변화하는 금리 환경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정부와 시장이 어떤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성장 공식의 변화와 투자 환경 재편 양상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경제 질서를 조망한다. 거시경제 흐름과 재정의 역할을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글로벌 경제 질서를 읽는 핵심 포인트

- **저금리 시대의 전환:**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저금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한다.
- **경제 질서의 재편:** 금리 상승, 고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구조적 변화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국가 재정의 대응 과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 재정과 경제정책이 준비해야 할 방향을 생각해본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기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방은 더는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과 기술혁신, 국가 경쟁력과도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과 산업, 기술혁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쟁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도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론 머스크 플랜 3』

이진복 저 | 미래의창(2024년)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AI와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 기업으로 조명한다.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AI, 에너지 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플랫폼 등 테슬라의 핵심 사업 전략을 분석하며 기술혁신의 흐름을 설명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테슬라 생태계'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에너지, 로봇, 인공지능 분야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를 조망한다. 또한 기술혁신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AI와 에너지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배경을 설명한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산업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을 고민하는 독자에게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미래 산업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 **기술혁신과 산업 변화:** AI와 에너지 기술이 산업 생태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
- **테슬라 생태계의 확장:**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 기술이 결합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이해한다.
-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 경쟁력:** 첨단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망한다.



이 책은

AI와 에너지 기술이
이끄는 산업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의 방향을
조망하는
미래 산업 전략서



NEWS

2026 June vol. 114

한국재정정보원 고객상담센터, 2026년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 고객상담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6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우수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서비스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2004년부터 콜센터 부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재정원 고객상담센터는 고객 접근성 및 응대율 향상을 위해 챗봇, 보이스봇 등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상담품질 관리와 상담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석호 원장은 “고객 중심의 상담체계 강화 및 응대 품질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공공재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EWS

2026 June vol. 114

한국재정정보원, 남산 위인 동상 연계 ESG 활동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6월 11일(목)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일(6월 16일)을 앞두고 서울 남산공원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선생 동상을 찾아 남산 위인 동상 연계 ESG 활동을 진행했다.

재정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 동상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 뒤 서울 남산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인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재정원은 남산공원의 역사적 위인 동상 추모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애독자 코너

• 2026.06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국방 기술혁신과 선진강군 육성을 지원하여 나라의 평화와 강력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 ① 안보정책 ② 국방전략
- ③ 국방예산 ④ 방산수출



힌트!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6.6.29. ~ 7.15.

★ 지난호 정답: ① 재정상태표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4066 010-****-2494 010-****-7369
010-****-8159 010-****-2201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구독 정보 변경 및 기타 월간『나라재정』과 관련한 궁금증은 02-6908-8638로 문의 바랍니다.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

Boryeong

MUD

FESTIVAL!!

제29회
보령머드축제

with MyK FESTA
2026.7.24.금~8.9.일
대천해수욕장 일원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2026. 6. 1. ~ 7. 22.

사업 데이터를 UP하면
내 경쟁력이 UP됩니다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 대면조사 또는 비대면조사

대면조사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비대면조사 | 온라인(PC, 모바일), 전화, 웹팩스,
웹메일 등을 이용하여 조사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 www.ecensus.go.kr

콜센터 + 080-700-2025 (평일 09:00 ~ 19:00) | (토요일 09:00 ~ 15:00)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